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북한·베트남 이주 노동자 연구

-사회주의 소련·동독으로의 이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n and Vietnamese Migrant Workers

-Focusing on Migration to Former Socialist Countries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남 현 승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년 6월 일

석사학위논문

북한·베트남 이주 노동자 연구

-사회주의 소련·동독으로의 이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n and Vietnamese Migrant Workers

-Focusing on Migration to Former Socialist Countries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지도교수 유 영 수

이 논문을 북한학 석사학위(정치통일전공)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 치 통 일 전 공
남 현 승

남현승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24년 6월 일

목 차

국문요약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8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11
제2장 이론적 검토 ····· 15
제1절 이주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들 ····· 15
1. 신고전파경제학 ····· 18
2. 이중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분절화 ····· 22
3. 사회 네트워크 분석 ····· 28
제2절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 연대와 규범 ····· 31
1. 경제상호원조회의 및 사회주의 연대 ····· 32
2.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 35
제3장 구동독 지역 베트남 이주 노동자 ····· 39
제1절 개관 ····· 39
제2절 1950~1970년대: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 41
제3절 1980년대: 노동 협정 체결과 '계약 노동자' ····· 44
제4절 1990년대: 독일 통일과 본국으로의 송환 ····· 50
제5절 소결 ····· 53

제4장 구소련 지역 북한 이주 노동자 ····· 57
제1절 개관 ····· 57
제2절 1946년~1967년 이전: 조직적 채용과 근로실습 ····· 61
제3절 1967년~1980년대: 임업 협정과 '벌목 사업소' ····· 63
제4절 1990년대: 소련 해체 후 나타난 변화 ····· 74
제5절 소결 ····· 81
제5장 결론 ····· 84
참고문헌 ····· 91

ABSTRACT ····· 97

표 목 차

【표 2-1】 북한 해외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들 ····· 16
【표 2-2】 북한-러시아 기술 수준 비교 ····· 24
【표 2-3】 소련의 대(對)북한 주요 원조협정내용, 1949~1981 ····· 25
【표 2-4】 노동이주와 발전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입장들 ····· 30
【표 3-1】 동독으로 파견된 베트남 노동자 인원, 1980-1990 ····· 46
【표 3-2】 1980년 협정의 주요 불이익 조항 ····· 48
【표 3-3】 구동독 노동자에 대한 체류 허가 조건(1993) ····· 52
【표 4-1】 소련 노동력 현황, 1970~1991 ····· 58
【표 4-2】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이주 변천 과정 ····· 59
【표 4-3】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 유입·유출, 1946~1949 ····· 62
【표 4-4】 북한-소련(러시아) 간 임업 협력 연혁 ····· 64
【표 4-5】 하바롭스크로 이주한 북한 노동자, 1967~1974 ····· 68
【표 4-6】 소련(러시아)-북한 간 임업 협정, 1987~1995 ····· 77
【표 4-7】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 2014~2018 ····· 83

그 림 목 차

【그림 2-1】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이면에 있는 북-러 비공식 경제협력체계 ····· 27

【그림 3-1】 로스토크의 베트남인 노동자들 ····· 47
【그림 3-2】 탈냉전 이후 베트남 경제성장률, 1991～1995 ····· 55
【그림 4-1】 북한-연해주 교역(2005) 및 북한 노동자 현황 ····· 58
【그림 4-2】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도 ····· 60
【그림 4-3】 벌목 사업소의 구성 조직 ····· 71
【그림 4-4】 북한 임업대표부 산하 각 사업소 조직 ····· 73
【그림 4-5】 탈냉전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 1991～1995 ····· 79

국문요약

북한·베트남 이주 노동자 연구

-사회주의 소련·동독으로의 이주를 중심으로-

정치통일전공 남 현 승

지도교수 유 영 수

북한의 노동자들은 이미 1940년대부터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이들은 주로 사할린 지역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였는데, 대부분이 인구가 부족하고 환경이 척박한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북한 이주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한국전쟁 이후 더욱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1967년에는 김일성과 브레즈네프(Леонид Брежнев)의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임업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북한에서 3,500여 명의 임업 노동자들이 소련으로 이주했다. 뒤이어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와 아무르주(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일대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노동력 이주와 관련된 양국 간 협정은 연장과 확대를 반복하며 지속된다.

비슷한 시기, 동남아시아에서는 남베트남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자국의 학생과 노동자들을 유럽에 있는 또 다른 사회주의 형제국인 동독으로 파견했다. 북한-소련 간 사례와 유사하게, 베트남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동독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1955년~1956년 시기 동독에 도착했던 '모리츠부르거'(Moritzburger)를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반까지도 수많은 베트남의 연수생들이 동독에서 일했다. 양국 간의 공식적인 노동 협정은 1980년 체결되었으며, 이후 동독 정부가 사라질 때까지 총 7만 여명이 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

약을 체결하고 동독으로 건너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나타난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목하였다. 최초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소련과 동독으로 이주했던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적 규범이었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형제국들 간의 연대에 따른 지원 혹은 원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연대의 이면에는 경제적인 측면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즉 소련과 동독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로 하여금 주로 이중으로 분절되어 있던 노동시장의 2차 부문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국 내 부족한 노동력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이주는 그 주체에 따라 학생, 연수생, 노동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혹은 어업이나 임업, 혹은 건설 등과 같이 시기별로 주로 종사하는 직종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이주 노동은 1990년대 이후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 등에 따른 동구권 진영의 붕괴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동독 정부가 사라진 이후 현지에서 일하던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독일과 베트남 정부 간 체결한 송환 협정에 따라 대거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일부 인원은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반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는 그 양상이 다변화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극동 지역에 맞닿아 있는 양국 간 지리적 인접성과 과거 같은 이념을 공유했던 역사적 배경,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이 가지는 노동력에서의 비교우위, 그리고 상호 간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로의 이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제어: 이주 노동자, 이중 노동시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베트남 계약 노동자, 북한 임업 노동자, 소련, 동독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인류의 역사에서 노동력의 이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과거 한국 역시 1963년 체결된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에 따라 박정희 정부가 실업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 등을 목적으로 서독에 광부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을 대거 파견한 바 있다. 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이들이 본국에 송금한 금액은 총 1억 153만 달러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던 서독의 경우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이후 스페인, 그리스, 튀르키예, 모로코, 포르투갈, 튀니지, 유고슬라비아 등 송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유럽의 주변국 노동자들이 서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초청 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1)]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주는 비단 한국 혹은 좀 더 확장한다면 서구권에서만 나타났던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이념적으로 정반대의 진영에 있는 북한 역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외 인력송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미 1950년대부터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시작된 시베리아·극동 지역으로의 벌목공 파견은 이후 1967년 3월 소련의 서기장이던 브레즈네프(Леонид Брежнев)와 북한 김일성 주석이 비밀리에 체결한 협약을 통해 본격화된다.[2)] 이후 1987년 협약에서는 파견인원이 연간 2만에서 2만 5천명

1)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The Age of Migration*,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서울: 일조각, 2013), pp. 178-184.

2)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협약의 주요 골자는 소련이 설비와 자재를, 북한은 벌목에 참여할 인력을 공급하고 각각 이익금의 60%와 40%를 나눠 갖는 조건이었다고 전해진다.

까지 증대되고, 지역 역시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를 포함한 아무르(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주 전체로 확대되었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노동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현지에서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노동당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을 상대로 한 북한의 자국 노동력 송출은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이루어졌다. 1948년 북한 정권의 수립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 아래 이루어졌던 점과 함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극동 지역과 북한의 지리적인 인접성 역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던 측면으로 존재한다. 이른바 이들 두 사회주의 형제국은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한 직종과 형태를 가지고 각각 노동력의 이입과 송출이라는 입장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해 온 셈이다.

이미 과거 러시아제국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 지역은 수도가 위치한 제국의 서쪽 영토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또한 척박한 환경 탓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역 당국에서는 항상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이것은 혁명 이후 새롭게 등장한 소련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소련과 국경을 접한 신생 사회주의 약소국이었던 북한이라는 존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즉 자국에서 생활이 어려웠던 북한의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극동으로 이주해왔으며, '소련 인민'들이 꺼려했던 업종들에 주로 종사하게 된다. 소련으로서는 극동의 부족한 일손을 자국의 노동자들에 비해 싼 값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주 노동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한 생계유지가 필요했던 북한 주민들, 그리고 신생 국가의 발전 및 통치 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북한 당국의 이해관계와도 역시 잘 맞아 떨어졌다.

북한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소련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은 1967년에 북한-소련 간 체결된 임업 협정[3]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협정을 통해 북한은 3,500여 명의 임업노동자들을 소련으로 송출하였고, 이들의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로 북한 당국은 소련 측으로부터 질 좋은 목재를 직접 현물로 받아 국제시장에 판매하여 소득을 올림으로써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주로 임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 교류는 상호 필요에 의해 협정의 연장과 확대를 거치며 지속되어 왔으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양국이 겪게 되는 급격한 변화들로 인해 잠시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4]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양국은 더 이상 같은 이념과 체제를 공유하는 형제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으며, 상호 간 협력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파견계약 체결과 연장을 이어나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5]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파견하는 노동력의 형태에는 또다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러시아에서 극동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시내 외곽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건설이나 미장(plastering)일 등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종주국 소련과 더불어 사회주의권 국가벨트에서 또 다른 중요 축으로 존재했던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의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였다. 동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서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주 노동자 고용을 위해 동독과 다른 송출국 사이에 체결된 최

3) 북-소 원동산림자원 공동개발협정(1967. 3.)을 지칭한다.

4)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뿐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인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의 계속된 불법행위와 함께, 이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 문제에 등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의 비판이 양국 간의 노동력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5) 2009년 영국 B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에도 여전히 북한 정부는 벌목 수익의 35%를 챙기는 방식으로 러시아에서 연간 미화 7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초의 협약은 1957년에 폴란드 인민공화국과 체결된 것이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노동 계약이 베트남이나 모잠비크, 앙골라, 쿠바 등 사회주의 동독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과 체결되었다. 특히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었으며, 1990년 독일이 재통일되기 직전까지도 비교적 많은 수의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 동독에서 고용되었다.[6)]

베트남 정부의 계약 노동자 송출, 특히 1980년대 이후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동독으로 이주했던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서독의 외국인 노동력 수입과 마찬가지로 계약 노동자의 파견은 동독과 베트남 양국의 현실적인 이익에서 비롯되었다. 동독은 경제가 호황을 맞으며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베트남 정부가 노동력의 해외 송출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국가채무 상환에 필요한 외화였기 때문이다.[7)] 그러나 북한과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들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그 의미의 일부만을 보는 해석이다. 즉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및 진영 내 모범국이던 동독은 북한·베트남과의 '노동 협약'을 통해 한편으로는 그들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서구 진영을 상대로 하는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진영 내 결속과 발전을 꾀하였던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에는 노동력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논의를 위해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의 이주 사례에서 먼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형성되어 있던 특별한 유대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단결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

6) Lam Huyen Trang Stephanie, "아시아계 노동자의 독일 이민과 통합: 파독 한인 간호사와 베트남 계약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1), p. 23.

7) 윤용선, "독일 베트남 이주민,"『역사문화연구』, 제47집(2013), p. 204.

채워나가기를 원했다.

소련은 북한 정부 수립 이후 각종 기계설비와 시설을 원조하였으며 또한 이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북한의 연수생들을 소련 내에서 교육시켰다. 동독 정부 역시 자국의 외국인 연수생 초청이 자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동독에서 활동한 외국인 노동자가 훗날 자국으로 귀국하여 동독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정책을 표방하였는데,[8] 즉 이처럼 소련과 동독은 상대 진영과 비교해 사회주의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우월한 체제'의 발전경로를 북한과 베트남에 적극 이식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냉전시기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를 중요시해온 점에 착안함으로써, 당시 소련과 동독 등 사회주의 선진국에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이주했던 것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이나 외화벌이의 목적만을 가진 것만은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의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일하며 벌어들인 상당량의 외화는 고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노동력의 이입국인 소련과 동독은 아시아의 형제국로부터의 노동력을 송출 받음으로써 통해 자국 내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회주의 진영 내 이주 노동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혹은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그 배경과 정치적 규범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전후 원조, 교육·실습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소련과 동독의 발전된 사회주의 시스템을 아시아의 두 형제국에 이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회주의 진영 내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반제국주의 진영을 상대로 한 투쟁에

8) 오정은, "독일 통일이 이민정책에 미친 영향: 동·서독 인구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관계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7(2018), p. 3.

서 승리하고자 했던 국제주의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각각 소련과 동독으로 이주했던 원인에 대해 특히 중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검토를 위해 사회주의 진영 내 노동력의 송출국으로 북한과 베트남을, 이입국으로는 소련과 동독을 각각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베트남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 때문이다. 두 국가는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서 등장한 신생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개전 이후 국제전으로까지 격화된 심각한 내전을 경험하게 된다. 전쟁 기간 양국은 각종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 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필요했다. 내수만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운용해 나가기에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과 베트남 정부 모두 자국 내 노동력을 같은 진영 내 다른 국가들로 파견함으로써 외부로부터 필요한 자원과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노동력의 이주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노동력의 이입국으로 선택한 소련과 동독은 당시 사회주의 진영 내 선두국가였다.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자국을 중심으로 위계를 설정하고, 진영의 결속을 위해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들을 지원하는 국제주의 이념을 채택했다. 동독의 경우 2차 대전 종전과 독일 분단 이후 수립된 비교적 신생 사회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높은 국민 소득과 경제 수준, 베를린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소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면 동구권 내에서 갖는 중요성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발전된 국가였던 소련과 동독은 경제가 성장해나감에 따라 공통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국적은 자신들과 동일한 사회주의 진영 내 소속되어 있던 국가였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동력의 이주 혹은

이주 노동자의 범위는 북한과 소련, 그리고 동독과 베트남 간에 이루어진 노동력의 이입·송출에 따른 것이 된다. 특히 북한 정부의 수립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소련은 이후에도 북한을 상대로 수많은 원조에 노력을 기울인다. 극동 지역을 접하고 있는 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은 이미 1940~195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력의 이주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며, 1967년 체결된 양국 간의 임업 협정은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다. 또 다른 축인 동독과 베트남 간의 교류 역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형태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은 북한-소련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견습, 인턴 등 신분으로 많은 수의 베트남인들이 동독으로 이주했다. 1980년 노동 협정 체결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약 7만 명 이상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독으로 떠났다.[9)]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북한의 노동자들의 소련 이주와 베트남 노동자들의 동독 이주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 진영 내에서 발생한 노동력 이주 현상의 원인을 찾아본다. 일반적인 이주 혹은 이주 노동과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하여 위 사례에 적용해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공유했던 정치적 규범과 유대관계에도 주목한다. 둘째, 북한과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과 베트남이 직면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이 선택하게 된 경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기존 사회주의 진영 붕괴 이후, 즉 소련이 해체된 후 30여 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러시아 지역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기초로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9) 시기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 파견에서 약 12,000명이, 두 번째 파견에서는 약 60,00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각각 동독으로 떠났다.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강경화의 연구(2015)에서는 북한의 북한인력 해외송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국가별 북한 인력 송출의 특징 및 추진 내용을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북한의 해외노동만을 다루되, 주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생성기(1967년~1991년), 확대기(1992년~2010년) 그리고 발전기(2011년~현재)로 나누고 시기별 해외노동 양상의 변화 추이를 제시한다. 연구를 통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시기별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0]

Lam Huyen Trang Stephanie의 연구(2021)에서는 서독 초청노동자였던 파독 한인 간호사와 동독 베트남 계약노동자의 이민과 통합 과정을 비교하는 것에 논점을 맞추었다. '아시아'와 '노동'이라는 공통적인 배경을 가졌음에도,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일 사회에 통합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서독의 파독 한인 간호사와 동독의 베트남 계약노동자의 이민 및 통합 과정을 비교하였다.[11] 이 연구는 분단된 서독과 동독에 각각 파견된 한인 간호사와 동독의 계약노동자의 이민·통합 과정에 대한 비교를 주로 다룸으로써 동독과 베트남 간에 이뤄진 노동자 파견에 대한 연구 주제를 제시한 의미 있는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비교는 당시로서 이념 경쟁을 벌이고 있던 동구와 서구권 블록에서 각각 행해진 노동자 파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전후 독일이라는 나라가 분단되어 각각 서독과 동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서로 속한 진영은 다르지만

10) 강경화, "북한 인력 해외송출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석사학위논문(2015), 국문초록.

11) Lam Huyen Trang Stephanie, "아시아계 노동자의 독일 이민과 통합: 파독 한인 간호사와 베트남 계약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 석사학위논문(2021), p. 3.

서구와 동구의 모범생으로 인정받던 양국에,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한국과 공산 통일을 이뤄낸 베트남이 각각 노동자를 파견했던 것이다. 연구의 결론부에서는 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독일 사회 내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까지를 다루고 있다.

한편 Christina Schwenkel의 연구(2014)는 1980년대 베트남과 구소련권(특히 동독) 간의 사회주의 노동의 이주 경로를 추적한다. 여기에서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던 동독 공장에서부터, 소련 붕괴 후 베트남으로 돌아와 베트남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까지를 다룬다. 특히 귀환한 사회주의 노동 이주자들로부터 얻은 경험을 통해, 현대의 수출 노동 정책과 국내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에 의존하는 정부에 중요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귀환자들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교육 및 직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빚과 고리대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정부는 과거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노동력 송출을 장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2)]

마지막으로 이채문의 연구(1998)에서는 당시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에의 유입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유입된 경과 및 실태, 그리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가정할 때 해당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가지는 함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및 인구유입·유출국의 이민정책에 주목하는 등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3)] 또한 이 외에도 과거 북한-소련 간 체결되었던 임업 협정의 연혁과 주요 관련 내용과 현지 벌목 사업 실태 등을 다루고 있다.

---

12) Christina Schwenkel, "Socialist Mobilities: Crossing New Terrains in Vietnamese Migration," *Critical Asian Studies*, Vol. 46, No. 2(2014), pp. 274-275.

13) 통일부, 『北韓實態』(서울: 統一部, 1998), pp. 131-134.

그러나 냉전시기 북한과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를 같이 다루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배경, 즉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와 지원을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의 경우 동독 내 베트남의 계약노동자 및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서독의 보트피플, 동독의 계약 노동자 상호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역사적 측면 혹은 '이주'에 맞춰져 있다. 반면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연구의 주된 초점은 '강제노동'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점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과 동독에서 일했던 북한과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를 다룬다. 이 시기 이주 노동이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 및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나타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것이 아닌 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과 그들이 일했던 소련과 동독이 모두 사회주의 국가였음을 감안하면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학적인 측면이나 외화벌이를 통한 경제발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안의 일부만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자본주의 진영에서 통용되는 이주에 대한 대표적 이론들과 함께 사회주의 진영 특유의 정치적 규범,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하는 그들의 연대와 진영 내 결속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그들은 서로를 형제국이라고 부르며 특별하게 여겼으며, 여러 기록들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탈냉전시기 동독에 있던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일부 현지에 정착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도 북한의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논문의 기본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헌자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인 문헌연구법(文獻硏究法)을 활용한다. 문헌은 기록으로 된 모든 문서나 서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 기록이나 역사적인 기록을 비롯하여 각종 서적, 통계자료, 법률 자료, 일기와 같은 사적인 기록,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 자료 등 매우 광범위하다.

문헌의 선택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 먼저 노동력의 이입과 송출이 나타난 두 축 가운데 북한의 경우 기존 선행 연구들을 주로 활용한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보고서, 선행 연구논문, 학술자료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참고하는 한편, 성과와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분석할 것이다. 분석 자료에는 북한 인력의 해외 송출과 관련된 논문들, 해외노동실태 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북한의 해외노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에서도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당시 북·소 관계 및 협정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문을 활용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계약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자료만으로는 당시 노동자 파견의 배경과 노동자들의 생활상 등에 대해 세부적인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해외의 연구문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권의 연구·논문 외에도 상대적으로 과거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독일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독일에서는 자국에 파견되었던 베트남의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연구의 관점 역시 이주·통합,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교류·연대(동독의 경우), 통일 이후 나타난 인종차별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 간 노동의 이동을 주로 연구한 C. Schwenkel은 동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독일 기록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베트남인의 목소리와 해외에서의 생활 경험에 대한 해석은 눈에 띄게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의 연구에서는 동독에서 생활하고 일한 후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도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14] 다만 이러한 자료의 비대칭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해외로 파견되었던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도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동독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독일에서 생산된 기록에 한정되어 있듯이, 1960년대 이후 북한과의 협정에 관한 세부 내용 및 파견 노동자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역시 과거 소련 측에서 보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증언을 활용하는 것이다.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첫째, 1967년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된 이후 구소련의 극동지역으로 파견되어 임업노동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현재 국내에 입국・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시점으로부터 이미 반세기 가량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1970~1980년대에 극동지역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기란 몹시 어렵다. 주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로 파견되어 벌목・건설 등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시기 전반을 포괄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

14) Christina Schwenkel, “Socialist Mobilities: Crossing New Terrains in Vietnamese Migration,”, p. 256.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저술한 수기 형식의 과거 문헌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나 어렴풋한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과거 북한의 노동력 송출에 대한 정보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해외파견 노동자의 선발과정, 현지 사업소의 위치・생활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히 문헌연구법의 경우 참고하는 문헌의 정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자의 연구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헌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행본의 경우, 오히려 구술 자료에 비해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 신뢰도를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15] 저자들이 직접 경험한 소련에서의 임금・생활여건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과, 사회적 인식 등을 비롯해 그들이 북한사회에서 느꼈던 인식 및 해외에서 겪은 경험이 가져온 변화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해외파견 노동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직접 저술한 위 세 편의 수기를 통해 국내외 논문을 포함한 기타 연구 자료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요한 북한의 국내외적 정치적 입장, 한국전쟁 전후 자신에 대한 원조를 바라보는 북한의 이념적 시선[16], 그리고 소련과 체결한 임업 관련 협정들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로동신문」을 활용하였다. 이는 보도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내와 해외 문헌에서 서술하는 주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정확성을 교차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1940년대~1990년대까지 주요 시기마다 나타나는 이주 노동에 대한 북한

15) 인터뷰를 대체하기 위해 선정한 문헌은 『인민이 사는 모습 2』(e북: 도서출판 오린, 2019),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정말 이럴 수가!』(서울: 연합통신, 1994), 『울음보가 터진 男子』(서울: 성심도서, 1993) 등 세 권의 단행본이다.

16) 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과 소련의 인식 변화와 당시의 분위기, 주요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능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냉전 시기 1960~1980년대에 걸쳐 북한과 베트남이 각각 소련 및 동독과 체결한 '노동 공급계약' 이후 해외노동자를 파견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냉전 해체 이후 북한과 베트남 양국의 변화 경로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계약 기간 현지에서 나타난 양국 노동자들의 생활방식, 이주자로서의 생존 전략과 함께 이후 1990년대 냉전 해체를 비롯한 국제정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사국 정부와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그간 시도해 보지 않은 베트남과 북한의 이주 노동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특징이다. 범주화를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렌즈는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표현되는 국가 간 연대이다. 이 경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다. 다음으로는 '이주'의 관점이다.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고 베트남과 북한의 노동력 송출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양국은 모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였다. 다만 이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도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다시 북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현재까지 계속되면서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는 대(對)러 노동력 송출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이주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주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이주 과정이란 국제이주를 유도하고 그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복합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의 집합이 요약된 개념이다. 이주는 사회적 존재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그 자체의 복잡한 동태를 발전시킨다. 이주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적이며, 각각의 방법은 각기 저마다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론적 접근들이 급증하고 또 상호작용하고 있다.[17]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노동자들의 이입과 송출 역시 큰 틀에서는 이주의 관점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가 간 이주를 발생시키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해외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초점을 국적, 이주, 인권, 지역,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 등 주로 어디에 맞추어 그들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용어 역시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주의 개념을 차용하여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는 추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에 거주하며 노동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북한 정권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제약들로 인해 실제로 '이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이주노동자로 칭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존재한다.[18]

---

17)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한국이민학회 역,『이주의 시대』, p. 54.

18) 이철수 외,『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 5.

<표 2-1> 북한 해외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들

용어	연구자	비고
북한 노동자	이용희(2016), 최영진(2016)	
북한 이주노동자	이수연(2018)	
노예 노동자	이영형(2016)	열악한 처지 강조 (인권적 측면)
DPRK workers overseas, DPRK workers abroad	UN의 각종 문서	
북한 해외노동자	최영윤(2016), 윤여상(2017), 이상신 외(2017)	
북한 해외노동자,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이철수 외(2019)	

* 출처: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p. 4-6. 내용을 저자 재정리.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은 사적 주체들의 계약에 따른 고용, 즉 노동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노동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행정기관 및 기업소에 의해 배치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임금과 식량배급,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19]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계획경제 시스템의 사실상 해체는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부문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제대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으며,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상당수 노동자들로서는 보다 나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해외노동자 역시 그 목적이 해외에

19) 윤애림,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민주법학』, 제73호 (2020), p. 205.

서 정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보다 많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단기 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0]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나타나는 이주노동이 주로 개인 단위의 경제적 유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에 이루어진 노동력의 이동이 시작된 것은 정부 차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즉 발전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한 소련과 동독 등 주요국들은 그들 나라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같은 진영 내 형제국들에서 찾게 된다. 반대로 심각한 내전을 겪었던 북한이나 베트남과 같은 진영 내 신생국들은 전후 재건사업을 비롯하여 정권의 안정화 및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송출국의 노동자들은 고국의 부족한 일자리와 재화 부족을 해결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간에 나타났던 노동력의 이동을 이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설명력은 점차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과거 소련에 파견되었던 북한의 노동자들은 해외에 나갈 수 있고,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나중에는 뇌물이 필요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0년대 이후 강하게 나타난다.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였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베트남이 파견한 해외노동자 역시 점차 이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해 특히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외파견 노동자' 혹은 '해외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이주 노동자'로 정의한다. 즉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에 대해 이주의 관점에서, 또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관련하여

---

20)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세종: 산업연구원, 2015), p. 269.

21) 즉 해외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기 이주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들, 예를 들어 노동력의 이입과 송출, 배출-흡인(push-pull), 노동자 파견, 해외 노동자 혹은 계약 노동자[22] 등에 대해서는 이주라는 개념의 하위 범주로 다룬다.

제1절에서는 노동력의 이주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고전파경제학, 노동시장 분절, 사회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이론을 소개한다. 위의 이론들은 저마다 이주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북한과 베트남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중 노동시장, 즉 분절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북한과 베트남 노동자들의 이주의 배경이 되는 사회주의 체제 고유의 정치적 이념 및 기구·제도 등을 소개한다. 먼저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를 통해 당시 나타난 경제적 통합과 노동력의 교류 등 흐름에 대해 개괄한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후원조와 약소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를 통해 약소국들의 '반제국적 연대' 및 '형제적 관계의 도움'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제3장(베트남)과 제4장(북한)에서의 논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서 활용되는 이러한 개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주 노동자를 설명하는데 있어 제1절의 내용과 결합되어 유용하게 활용된다.

1. 신고전파경제학

경제학 분야에서는 신고전학파 이론이 아직까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남아 있으며, 대안적 접근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해 왔음에도 이주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배출-흡인' 이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을 자신들의 출생지에서 떠나게 만드는 '배출 요인'과 이들을 특정한 수용

22) 동독에서는 자국으로 일하러 온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계약노동자'(Vertragsarbeit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로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결합된 것이 이주의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배출 요인'은 인구의 증가,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과 정치적 억압 등이며, '흡인 요인'은 노동에 대한 수요, 토지의 이용 가능성, 좋은 경제적 기회 및 정치적 자유 등이다.[23]

나아가 매시(Massey)에 의하면 신고전파경제학적인 설명은 크게 거시 이론과 미시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루이스(Lewis), 라니스와 페이(Ranis and Fei)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의 노동시장은 농촌 지역의 저렴한 노동 '공급'을 흡수한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농촌 지역에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반면 도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금이 점차 낮아진다. 이렇게 두 지역 간의 임금격차가 좁혀지면 생산요소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24] 즉 농촌 지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주에 대한 유인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 이주 사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이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거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선진·공업국가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송출로 확장해 본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3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은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위해 선진국이었던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다. 이념이나 진영과는 무관하게,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력의 배출이 공산주의 이념을 채택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루어졌다. 북한의 경우 비슷한 시기인 1967년 소련과 '임업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 노동자들을 극동 지역으로 파견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전쟁(1960~1975년)에서 승리한 뒤 통일을 이뤄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역시 1980년에 동독과 노동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대규모 노동력을 송출했다.

---

23)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p. 55.

24) 마이클 새머스(Samers, Michael), 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공역, 『이주』 (서울: 푸른길, 2013), p. 102.

위 설명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주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이다. 반면 미시적 관점은 이주자를 송출국과 이입국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완벽한, 또는 다양한 정보에 반응하는 합리적인 개인으로 간주한다. 이주자들이 소득, 고용 가능성, 고용조건을 최적화시켜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주 지역 또는 국가에서 더 나은 기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25] 미시적 수준에서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합리적 개인 모델을 제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전경제학적 접근을 사회주의 국가 간 발생했던 노동 이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수준의 설명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개인의 의지보다는 보다 국가적 차원 혹은 국가 간 이념적 차원에서의 정치·경제적 목적에서 노동력 송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6]

결론적으로 신고전파경제학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나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출-흡인'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인들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함으로써 노동력의 이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과거 소련·동독 및 북한,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과거 공산권 국가들로 시야를 돌린다면 그들 국가 간의 이주노동에도 신고전파경제학의 개념들을 일부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과거 북한과 베트남에서 각각 소련과 동독으로 노동자들이 이주했던 것은 송출국의 배출 요인과 이입국의 흡인 요인이 결합된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낮은 생활수준을 가진 국가의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이주한다. 이 경우 양국의 임금 수준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송출국의 노동자는 이입국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이다.

한편 신고전파경제학과 유사하지만 개인보다는 가족 또는 친족과 같은 보다 큰 단위를 강조하는 것이 신경제학적인 설명이다. 여기에서 상정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희소한 자원을 다양하게 배분함으로써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단

25) 위의 책.

26) 물론 국가 간 협정 체결 이후 노동력 파견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경우 파견 노동자를 선발함에 있어 높은 임금 등 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자유 등 '이주'에 대한 개인의 의사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위이다. 마치 경제학에서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의 개념과 같이, 가족 구성원의 일부만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나머지 구성원의 노동력(또는 희소 자원)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본국에 남아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 보내 준 송금으로 재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주는 신고전학파의 설명처럼 단순히 절대수입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원국의 거주 지역에서 다른 집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살거나 혹은 덜 궁핍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자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27]

앞서 살펴본 신고전파경제학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해외노동자로 파견되기를 원하는 것은 개인의 수익 혹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신경제학파는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가족을 비롯한 최소 '집단' 정도의 단위를 채택한다. 개인보다 큰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개인은 이주를 통해 송출국 내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즉 노동자들이 타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자신의 가족을 비롯하여 본인이 속해 있는 다양한 집단을 보다 풍족하게 영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경제학파의 주장을 북한 혹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사례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과거 북한-소련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초기에 파견되었던 북한의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노동의 대가로 급여 대신 '돈표'라고 불리는 일종의 교환증서를 받았다. 그들은 '재쏘상점'이라고 불리는 북한 내 상점에서 이 돈표를 필요한 재화들과 교환할 수 있었다. 파견노동자의 가족들은 주변 가정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재쏘상점에는 북한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자료들이나 증언을 통해 북한과 베트남의 이주노동자 모두 현지에서 규정된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 외에도 각종 부업(북한에서는 '청부'로 표현)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부업을 통해 획득한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27) 마이클 새머스(Samers, Michael), 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공역, 『이주』, pp. 106-107.

비롯한 각종 물품들을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소련과 동독에서 보내온 물건들로 인해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들의 이웃들과 비교했을 때 본국에서 더 나은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집단 차원의 편익을 강조하는 것이 이주 노동을 설명하기 위한 신경제학적인 접근이다.

결론적으로 노동 이주에 대한 신경제학파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집단이며, 연구자들은 이주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구 조사나 질적 인터뷰 같은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비롯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송출 지역의 자본과 신용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험 체계가 결여된 상황에서 흉작 및 실업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서 또는 노후를 위한 방편으로서 이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28] 다만 이러한 시장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송출국 내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과 비교·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2. 이중 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분절화

피오레(Michael Piore)에 따르면 이중 노동시장은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1차 부문의 직종은 시민권을 지닌 '현지' 노동자에 의해 선점되는데 보통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며, 노동환경이 좋고, 승진의 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꽤 오랜 기간의 연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들 직종의 종사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높고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주로 이주자들이 고용되는 2차 부문의 직종은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승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저임금·불안정 고용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2차 부문은 현지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우며, 따라서 고용주들은 이주

28)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pp. 59-60.

노동자들이 이 부문을 채워주길 기대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유럽과 미국의 노동시장과 이주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주의 시발점과 지속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29]

명목상 노동자들의 국가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노동시장 역시 이러한 분절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미 북한 정권 설립 전후인 194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련 혹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의 노동력 송출은 지속되고 있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분류의 척도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변화와는 별개로, 시기별로 주(主)가 되는 직종은 현지 국민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2차 부문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특히 브레즈네프-김일성 간 회담의 결과로 1967년부터 북한의 임업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파견된 시베리아 지역의 척박한 근로환경은 이러한 부문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극동의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소련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 당국은 상대적으로 저임금·비숙련 노동자인 북한의 노동인력을 통해 분절된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기술 수준의 차이 역시 이중노동 시장을 설명한다. 1990년대 초반에 작성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기술 수준은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대략 30% 내외 수준이다. 따라서 파견 인력의 기술 습득의 정도를 고려하면 소련 당국 역시 이들을 전문직이나 서비스직종이 아닌 단순노무·저숙련 직종에 종사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다. 과거 사할린을 비롯한 쿠릴열도, 캄차카 지역 등에서의 어로활동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벌목활동(임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외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출처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 도심·외곽지역 건설 현장 등은 모두 노동시장의 2차 부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9) 마이클 새머스(Samers, Michael), 이영민 외 공역,『이주』, pp. 107-108.

양국의 기술 수준 비교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 분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아래의 표는 러시아의 기술 수준을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 전반에서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기술 수준은 30~40% 수준이며, 따라서 기계·금속공업, 전자·정보통신 및 화학공업 등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군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북한의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2차 부문, 즉 저숙련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다.

<표 2-2> 북한-러시아 기술 수준 비교

(단위: 러시아=10)

연번	구분	북한	러시아
1	기계공업	3	10
2	금속공업	4	10
3	전자·정보통신	3	10
4	화학공업	3	10
5	시멘트·제지공업	3	10
6	방직공업	4	10

* 출처: 심의섭·김종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제2호(1999), p. 46.

소련이 북한을 상대로 실시한 대규모 원조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표 <2-3>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81년 기간 동안 확인되는 금액만 총 13억 3천만 루블에 달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장, 발전소, 제철소 등 중공업 분야 장비 보급을 위한 현물·재정 지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공유했던 양국 간 경제협력은 차관 형태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북한이 소련을 상대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조 무역의 형태였다.

<표 2-3> 소련의 대(對)북한 주요 원조협정내용, 1949~1981

(단위: 100만 루블)

일시	목적	금액	상환 조건
1949. 3.	경제시설 건설 지원을 위한 차관		
1949. 3.	현물차관	47.7	
1953. 8.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차관	225	무상
	旣 제공한 차관 지불의 면제[30]		
	旣 제공한 차관 채무 잔여분의 지불 연기		
1956. 8.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차관	67.5	무상
1960. 7.	旣 제공한 차관 채무의 면제	171	
	旣 제공한 차관 채무 상환 연기	31.5	
1965. 5.	북한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정원조		
1966. 6.	경제시설 건설 지원을 위한 차관	160	2%이자, 장비보급과 완공 이듬해부터 10년 간 상환
	1949년, 1961년, 1965년의 협정에 따라 1966~1970년 사이에 소련에 지불해야 할 채무 지불 연기		1971년부터 14년 간 상환
1970. 12.	자동차 배터리, 에나멜선, 소형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		공장가동 이듬해부터 생산된 제품으로 5년 상환
1976. 2.	김책제철소 재건 지원을 위한 차관 (제1차)	12	2%이자, 상환기간 8년, 해당공장 제품에 의한 상환
	김책제철소 재건 지원을 위한 차관 (제2차)	45	2%이자, 상환기간 8년, 생산가동 이듬해부터 해당공장 제품에 의한 상환
	청진발전소 건설지원을 위한 차관	40	2%이자, 장비제공 만료 이듬해부터 10년간 상환
	암모니아공장,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	20	2%이자, 상환기간 10년
	1949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70년 9월, 1970년 12월, 1973년 협정에 따라 1976~1980년 사이에 소련에 지불해야 할 채무상환을 위한 차관	400	1981년부터 2%이자, 상환기간 10년
1981. 5.	1981~1985년 사이에 발생한 연체 지불을 위한 원조	110	1986년부터 4%이자, 상환기간 10년

* 출처: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p. 284. (재인용)

30) 채무의 절반 이상 금액.

지금까지 분석에 따르면 북한과 소련 간 경제적 교류는 원조무역 형태 외에는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노동력을 공식적 협의를 통해 소련 측에 송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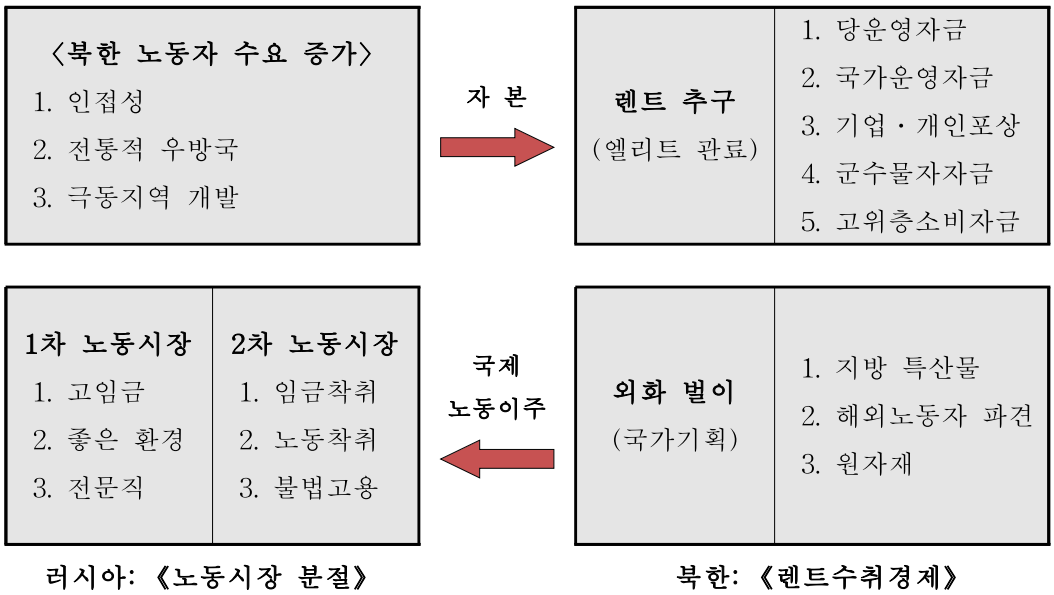
노동시장이 1차와 2차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던 소련 측에 있어서도 북한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광범위한 영토의 외곽지역에 위치한 극동지역의 발전과 부족한 인구·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은 인건비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뿐 아니라 소련의 자국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직장으로부터의 이탈 및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과거 북한의 노동자들이 주로 파견되는 곳이 극동이나 사할린을 비롯한 현지에서도 일하기 꺼려하는 지역이었으며, 그 분야 역시 어로, 임업 등 기피직종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양국 간 노동력의 이입과 송출에서 이입국 내 '이중 노동시장'을 강조하는 측면은 더욱 강화된다.

노동시장 분절화 접근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위 직종들에는 2차 부문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저숙련·저임금 및 이와 대비하여 존재하는 노동 현장의 높은 위험성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임금 차별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일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돈을 만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노동자로 파견되기를 원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점 역시 파견을 희망하는 주요 사유로 꼽히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러시아 내 노동시장 분절을 북한의 '렌트수취경제'와 결합하여 북한 노동자의 이주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렌트수취경제는 부(富)의 창

출이 국가와 사회 내의 소수 특권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이다. 이렇게 획득한 부를 통해 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북한 내 엘리트 세력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획득한 부는 새로운 투자나 경제발전에 쓰이는 대신 특권층 개인의 사치성 소비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 및 특권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된다.[31]

<그림 2-1>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이면에 있는 북-러 비공식 경제협력체계



* 출처: 정성준,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이면에 있는 북한-러시아 비공식 경제협력체계," 『평화통일논총』, 제2권 1호(2023), p. 194.

즉 1차와 2차로 분절되어 있는 이중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 측의 수요와, 당·국가운영자금을 비롯한 개인의 소비자금 등 북한 내 엘리트계층의 지대추구행위가 결합하여 북한과 러시아 간에 비공식 경

31) 정성준,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이면에 있는 북한-러시아 비공식 경제협력체계," 『평화통일논총』, 제2권 제1호(2023), pp. 181-209.

제협력체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양국 간에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러시아 지역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지속되는 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이주의 형태로 진출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착취적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이주체계 이론(migration system theory)은 이주의 흐름이 일반적으로 식민지배, 정치적 영향, 무역, 투자 또는 문화적 유대 등에 기초한 이민 송출국가와 이민 수용국가 간에 이전부터 존재하던 연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미국 이주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낳은 장기적 결과였으며, 튀르키예인의 독일 이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독일의 노동력 모집에서 기인한 것이었다.[32]

마찬가지로 동구권의 노동력 이전을 이주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송출국과 이입국 간의 정치적 영향이나 문화적 유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초기 북한 정부의 수립에는 소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또한 양국은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상호 간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북한의 재건에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그들의 형제국을 도운 바 있다. 북한의 정치제도 역시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언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러시아어 차용어 등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조선 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 항일투쟁 시기에도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유대감이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만강을 사이에 둔 무역활동이 역시 활발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주 네트워크는 이주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정보·

32)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p. 65.

지식을 조직하는 역량, 일자리나 주거지를 알선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공동체 연계 및 상호 지원 등 사회적 연결망이 사회적 자본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에 필요한 재정이나 다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주를 지속하게 해 주는 동력이 된다.[33]

물론 사회 네트워크가 단순히 가족, 친족, 향우회와 같은 '강한 유대'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네트워크는 사업체부터 그들의 하청업체, 정부 공식 및 사설 구직 알선업체, 밀입국,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합법·비합법적으로 작동하는 다양한 범위의 행위자를 포함한다.[34] 이 관점에 따르면 과거 소련이나 동독 내에서 북한에서 파견된 해외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난 불법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들의 계약조건 상에는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파견된 국가의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주거지역에서 벗어나 계약에 따라 현지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였다. 실제로 1950년대에 하바롭스크 벌목장에서 일하던 북한 이주 노동자들의 다양한 불법행위(남벌·밀수)들로 인해 소련 측에서는 1967년에 다시 협정을 체결할 때 까지 북한 측의 노동력 송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사례도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동독에서 베트남 계약 노동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현지 호스텔(숙소)에 대한 동독 국가보안부(슈타지)의 1989년 9월 연례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모든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들의 호스텔은 진정한 창고입니다.** 산업 소비재 외에도 식료품 비축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과 발코니, 계단에는 **연료 용기를 포함한 분해된 오토바이가 널려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 화재, 보건 및 위생 규정이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하룻밤 숙박이 증**

33)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p. 197.
34) 마이클 새머스(Samers, Michael), 이영민 외 공역, 『이주』, p. 134.

가했으며, 이는 투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직원 부족으로 인해 출입국 검사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5]

<표 2-4> 노동이주와 발전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입장들

이주 이론	분석단위	주요 주장	발전과의 연계	문제점
신고전주의	개인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근거(유출-흡입 요인)	낙관적	공급 측면 강조
신경제학	가구	가족 혹은 가구 결정, 임금 출처의 다양화(송출금과 개발 연계)	낙관적	공급 측면 강조
분절노동시장	국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선진국의 구조적 수요(비공식적 수요 인정)	회의적	수요 측면 강조
네트워크(연줄망)	구조・연줄・개인	개인 뿐 아니라 네트워크에 관심	-	비공식 관계 중시
체계	국가・연줄・개인	거시・미시구조의 상호작용 결과	역량 의존	공식 관계 중시

* 출처: 최영진,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新亞細亞』, 제17권 제4호(2010), p. 198.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역시 이주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다차원적 구조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은 이주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된 크리츠와 즐로트닉(Kritz and Zlotnik)의 이주체계론을 조금 더 확장하여 제안된 것이다. 카슬과 밀러는 인구이동을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한다. 여기서 거시구조는 세계시장의 정치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이주를 통제하는 송출국과 이입국 정부에 의하여 확립된 법, 관행 등의 대규모 구조적 요인들을 말한다. 미시구조는

35) Mike Dennis, "Working under Hammer and Sickle: Vietnamese Worker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80-1989," *German Politics*, Vol. 16, No. 3(2007), pp. 346-347. (저자 강조)

이주자들의 사회연결망, 관행, 신념 등의 미시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주의 거시구조를 구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세계체계론은 과거 5세기에 걸쳐서 점점 더 통합되어온 세계경제의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발전이 인구이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36]

결론적으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나타난 이주노동 현상에 대한 분석은 거시구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력 송출은 상대국과의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라 각각 1967년과 1980년에 체결된 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에 대한 더 정교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구조에 대한 검토, 즉 파견이 시작된 이후 현지에서 노동자들이 체류하며 일하는 동안 나타나는 다양한 행태들을 함께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제2절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 연대와 규범

소련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인구 이동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이동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인구 이동과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은 이들 국가 간의 계획과 규제에 의한 '일시적인 노동력 이동'이라는 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이들 국가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원조의 한 형태의 표현이라고 강조되며, 정치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합을 고양시키고, 각국의 기술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간주된다.[37] 즉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이 이주했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

36) 석현호,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제23권 제2호(2000), pp. 22-23.

37) 통일부, 『北韓實態』(서울: 統一部, 1998), p. 138.

요인 외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연대와 정치적 규범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야만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나타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첫째, 경제상호원조회의(CMEA)의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CMEA는 동유럽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바르샤바 조약 기구(Организация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와 함께 자본주의 진영에 맞서기 위한 또 다른 한 축, 즉 경제적 기능을 담당했다.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및 부흥을 목적으로 창설된 이 기구는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진영 내 국가들 사이에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력 이동에 대한 특색으로 반제국적 연대와 함께, '형제적 관계의 도움'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소련과 동독 등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들로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 체계 내에서는 노동력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맹국들로부터 대규모 노동력을 송출 받는 한편, 그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진영 내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다. 셋째, 이러한 형제국 간의 유대에 있어 정치적 규범으로 작용했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개념을 통해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소련과 동독으로 이주했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 간에 있었던 노동력의 이주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1. 경제상호원조회의 및 사회주의 연대

사회주의 사상의 고전들은 국제주의 사상을 선언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 이래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였다. 민족국가들로 분리된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호 간에 경제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황이 역사에서 발생하기 전

에, 많은 사람들은 국경의 중요성이 쇠퇴할 것이며 초국가적인 사회주의 경제공동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38] 다만 코르나이(Kornai)에 따르면 그러한 기대는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았으며, 오직 'CMEA'[39]의 창설·운용에 의해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시도되었다.

흔히 코메콘(COMECON)이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CMEA(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stanc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상태에 있던 서유럽 경제의 재건을 목적으로 1947년 미국이 창설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6개국(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의 경제협력과 부흥을 목적으로 하였다. 창설 당시에는 위 6개국이 참여하였으나 그 해 알바니아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이후 1952년 동독, 1962년 몽골, 1972년 쿠바, 1978년에 베트남이 차례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나 1961년에 알바니아가 탈퇴함으로써 10개국을 구성원으로 하였다. 그 외 유고슬라비아, 북한, 라오스, 앙골라,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등 7개국은 준회원국(옵서버)으로 가입하였다.[40]

다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베트남과 달리 북한의 경우 '세브'를 둘러싸고 소련과의 갈등을 분출하였다. 1961년 소련은 '사회주의 국제 분업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1962년 사회주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CMEA에 정식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 북한은 기존의 옵서버 역할조차 중단하고, 소련의 행위를 '내정간섭', '대국주의 경향'으로 비난하였다. 1950년대 전후 복구 이후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대한 이견으로 북한-소련 관계는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지만, 북한의 가입 거부는 1962년이라는 시점에 양국 간 갈등이 분출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 CMEA는 사회주의 공동체의 대표적 경제기구로 북한의 탈퇴는 소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41]

---

38) 야노쉬 코르나이(Kornai, Janos), 차문석·박순성 공역,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파주: 나남, 2019), p. 595.

39) 러시아어로는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СЭВ)라고 표기하며,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약칭인 '세브'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40) 편집실, "알아둡시다: 코메콘," 『지방행정』, 제39권 제435호(1990), pp. 156-157.

1960년대 말 소련은 이른바 '형제적 관계의 도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주의 동맹국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게 된다. 물론 이들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주체들에게는 무척이나 값싸고 질이 높았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소련과 북한은 하바롭스크주의 벌목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북한은 수백억 달러를 벌어갔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소련에는 CMEA의 결정에 따라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노동력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들 동구 국가들에도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득이 취해졌음은 당연한 이치였다. 동구 국가들은 원유를 가져갈 때는 '우정'이라는 명목을, 가스를 가져갈 때는 '형제관계', 그리고 기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42]

자국민과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통치구조와 함께, 노동에 대한 숭고한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동독 정부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해 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념적 장치가 필요했다. 경제의 발전 속도에 맞춰 노동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은 계획경제에 대한 오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 또한 자국내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발생하는 일손 부족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송출 받은 노동자를 통해 충원하는 것은 마치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노동에 대한 천시나 계급에 근거한 차별의식의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따라서 소련이나 동독의 인민들에게는 자국 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형제국의 인민들을 교육・발전시킴으로써 그들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정치적 이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물론 이와 같은 형제국 간의 유대가 단순히 사회주의 경제 원리의 오류를 보완하고자 하는 이념적 차원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신생 사회주의 약소국들은 실제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41) 박아름,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 분석," 『역사문제연구』, 제45호(2021), pp. 448-449.

42) 심의섭・김종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제2호(1999), p. 41.

CMEA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북한과 베트남의 경우 전후 원조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상호 원조 관행과 '반제국적 연대'를 통해 세계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비자본주의' 세계 내 재건 프로그램 역시 존재한다. 공산권 국가들은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행동하는 연대'(Solidarity in Action)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에서 전개되는 반(反)식민 혁명에 대한 지원을 국제적으로 과시했다. 이러한 상호 원조 관행은 국제 공산주의 공동체의 지정학적 구성원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탈식민지 연대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득력 있는 개념에 뿌리를 둔 세계 인류에 대한 사회주의 비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43]

2.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평화 공존론'과 더불어 소련 외교정책의 양대 기둥을 형성한 국제관계 이론이다. '평화 공존론'이 사회경제 체제가 다른 국가들(특히 서방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을 지도한 이론이었다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지도이론이다. 따라서 전자는 서구의 전통적인 국제관계 이론에서와 같이 국가를 국제관계의 기본 행위단위로 상정한 것인데 비해, 후자에서는 계급이념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이론의 전통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계급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는 국경을 초월한 계급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4]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세계 각국의 공산당이 당제관계와 국가관계를 처리할 때 따르는 정치적 규범이 바로

---

43) Christina Schwenkel, "Socialist Mobilities: Crossing New Terrains in Vietnamese Migration,", p. 242.

44) 이상우 · 하영선, 『현대 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4), pp. 128-129.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다.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Владимир Ленин)과 스탈린(Иосиф Сталин)의 관점에서 볼 때, 각국 공산당의 전략과 책략은 바로 프롤레타리아를 발동시키는 세계 혁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서 각국 공산당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도 원칙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각국 공산당은 반드시 소련을 지지·보위해야 하고, 모든 것을 소련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하며(즉 국제 프롤레타리아 이익의 체현), 소련은 마땅히 각국 공산당의 혁명투쟁을 돕고 원조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Communist International)의 정치적 규범이었다.[45]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동아시아의 신생 사회주의 약소국이었던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전후 원조가 이뤄진 것 역시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규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당시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전후 경제를 복구함에 있어 형제적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원조를 받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형제적 인민의 연대와 협력은 이후 북한-소련 간 협정 체결을 통해 다수의 북한 이주 노동자들이 소련으로 건너 가 일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근로자들의 친선과 우의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사상은** 자본주의적 철쇄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과 식민지 및 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 승리한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체근로인민의 수중에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의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며 전후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 로력 투쟁에서도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의 시종일관한 국제주의적 원조를 받고 있다.**"[46]

---

45) 심지화(Shen Zhihua)·이단혜(Li Danhui),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딜레마에 관한 서론: 중소 동맹의 결렬로 본 사회주의 국가관계의 구조적 불균형," 『大東文化硏究』, Vol. 98, pp. 16-17.

46)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기치 밑에," 『로동신문』, 1956년 4월 21일. (저자 강조)

"1949년 3월 량국간에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한 량국간의 관계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되었다.

특히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국 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쏘련인민은 우리 인민에게 적극적인지지 성원을 주었는바** 특히 우리의 식량 사정이 그렇듯 곤난하던 때에 쏘련인민이 5만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보내 준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와 지지는 자기의 아들딸들을 지원군으로 보내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의 피의 원조와 함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표현으로서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었다.**

이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의 생활력은 우리의 전후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는 투쟁 시기에 있어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47]

그러나 흐루쇼프(Никита Хрущёв) 집권 후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한 필요가 생기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었으며, 브레즈네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책실천의 측면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반영되고 이론적으로도 한층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흐루쇼프 집권 후반기부터 사회주의 국가군의 범위가 동유럽과 중국대륙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카리브 해 지역에까지 확대되었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띤 정당들이 집권한 이른바 '사회주의 성향'(socialist-oriented) 국가들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브레즈네프 정부는 사회주의권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권 내부의 국제적 경제 분업(socialist division of labor)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CMEA 차원의 경제통합 증진은 물론 제3세계의 우방국들에 대한 원조정책을 변경하였다. 즉, 흐루쇼프 시대의 보편적인 관행이던 순전히 정치적 성격의 경제 원조를 보다 경제적 분업구조의 형성

47) "위대한 쏘련은 조선인민의 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이다,"『로동신문』, 1957년 8월 13일. (저자 강조)

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즉 사회주의 약소국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의 성격에서 당사국 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다.[48]

제1절과 제2절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북한과 베트남 노동자의 다른 국가로의 이주 원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최초 이주 혹은 초창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과 정치적 규범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들 국가 간의 유대와 결속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같은 진영 내 신생 약소국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연결되었다. 둘째, 이주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개인의 경제적 유인이 점차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그들 간에 공유했던 같은 이념적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냉전 시기 북한에 있어서도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은 북한의 매우 귀중한 외교적 자산이자 한발 나아가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외적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국가 수립 이후 북한은 소련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을 대상으로 하는 진영외교를 무엇보다도 중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제공하였던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다.[49]

---

48) 이상우・하영선, 『현대 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4), pp. 130-132.

49) 백성호,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특징: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로동신문』의 사설분석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5권 제4호(2005), p. 177.

제3장 구동독 지역 베트남 이주 노동자

제1절 개관

앞선 논의에서 송출국가와 이입국가 간의 유대를 통해 이주 현상을 설명한 것처럼, 베트남과 동독 간의 정치적·문화적 유대는 이미 1950년대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동독은 베트남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 베트남이 아직 전쟁 중이던 기간에도 상당수의 베트남 견습생들이 동독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현지에서 일을 배웠으며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였다.

구동독의 경우 대체로 196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분단 상황과 관련이 깊다. 1949년 동독이 건립되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340만 명의 주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동독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동독이 이들 노동자를 데려온 목적은 제3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를 돕는다는 기치로 국제적 연대감을 보여주고 신생국가들의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돕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동독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고 이들의 월급을 받아 그 부채를 갚도록 하였다.[50]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독과 베트남 양국에는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동독은 자국의 인력만으로 내부에서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베트남 역시 통일 이후 강력한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나,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대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당시 베트남 정부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더하여 노동력을 수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초

50) 최윤영,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 22-23.

까지 약 30만 명 정도가 소련과 동유럽으로 노동 이주를 떠났다. 일부는 건설 붐이 한창 이던 중동의 이라크로 가기도 했지만, 당시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대표적 이주국은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였다.[51] 베트남은 1980년, 동독과 '노동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파견은 지속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이주했던 동독(GDR)은 당시 공산권 국가의 대표적인 '모범생'으로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종주국인 소련보다도 더 나은 사회적 발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고, 또한 독일의 공학 기술은 역사가 길었기에 '형제 국가들'을 돕기에 위치가 좋았다. 형제 국가들도 급여제도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자금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한편 독일민주공화국 경제는 만성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기에 임시 파견 노동자들은 시장의 공백을 메우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52]

동독 내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들은 제4장에서 후술하는 북한의 사례와는 차이점을 나타낸다. 소련으로 이주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1940~1950년대 사할린과 캄차카 등을 비롯한 극동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인력부터, 1960~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임업 노동자, 그리고 이후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건설 노동자들까지 대체적으로 그들이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구분된다. 즉 시기별로 계약 혹은 이주 방식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그들의 신분은 계약 혹은 단기이주 노동자로서 동일하였다. 반면 동독과 베트남 간에 이뤄진 인력 송출의 경우 좀 더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양국 간에 이뤄진 이주의 움직임은 단순히 노동력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연령과 신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벨마이어(Hüwelmeier)의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의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모리츠부르거'(Moritzburger)로 알려진 그룹으로, 1955년에서 1956년

51) 위의 책.

52) 카트야 호이어(Hoyer, Katia), 송예슬 역, 『장벽 너머: 사라진 나라, 동독 1949-1990』(파주: 서해문집, 2024), p. 432.

사이에 동독에 도착한 어린이들을 말한다. 이보다 큰 규모로 동독의 두 번째 베트남인 그룹은 미국-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베트남을 떠난 학생, 견습생 및 인턴들로 구성되었다. 1966년 정부 계약에 따라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많은 수의 견습생과 인턴들이 동독 기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동독 및 기타 국가들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했던 1980년대 시기에는 베트남으로부터 동유럽 국가들로의 대량 이주가 발생하였다.[53]

본격적인 노동력의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간 노동협정이 체결된 1980년 이후로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6만여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약 노동자 신분으로 파견되었으며, 이는 동독 내 이주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통일이 되던 해인 1990년에도 일부 인원이 파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2절 1950~1970년대: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동독과 공산주의 북베트남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1950년대에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연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독에서 훈련받은 학생, 도제(徒弟)와 과학자들은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에 힘쓰게 된다.[54]

노동력의 이입국의 입장이었던 동독은 자국 내 노동력만으로 경제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당시 치열한 체제경쟁을 벌이던 서독의 '초청노동자 제도[55]'를 비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1950년대부터 다수의 외국인을 저숙

53) Gertrud Hüwelmeier. "Socialist Cosmopolitans in Postsocialist Europe: Transnational Ties among Vietnamese in the Cold War Period and Thereafter,"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12, No. 1(2017), p. 133.

54) Ngo, Bao Trang, "Integration der Vietnamesen in Ostdeutschland: Deutsche und vietnamesische Sichtweisen in qualitativen Interviews," (Zwickau: Westsächsische Hochschule Zwickau, 2021), pp. 23-24.

련 노동자로 수용・활용하였다. 동독 정부는 외국인연수생 제도의 형식을 빌려 외국인 노동인력을 수용하였고, 이들에 대해 초청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공산주의 형제국가로부터 기술연수를 온 “친구”라고 호칭하였다.[56]

북베트남은 전국 단위로 각 주마다 인재들을 골고루 선발해 외국으로 보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응에안 성(Nghệ An province)의 경우 400명을, 라오스 국경 인근 라이쩌우(Lai Châu)와 라오까이 성(Lào Cai Province)에서는 각각 20명의 유학생들이 선발되어 기술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졌다. 당시 북베트남의 주(Province)가 31개였음을 상기해볼 때, 북베트남 정부가 해외로 보낸 유학생의 수는 최소 620명, 최대 12,400명 정도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57]

베트남에서는 “동독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진보적 이상”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들만이 유학에 선발되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습으로 인한 하노이의 높은 사망자 수는 해외로의 유학을 매우 바람직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큰 특권이자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으로 다가왔으며 특히 동독은 부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내던 곳이었다.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은 베트남으로 돌아와 정부에서 일했는데, 해외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베트남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의 도시 재건에 있어서 동독에서의 학문적 훈련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58]

---

55) 1950년대 중반, 독일(구 서독)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노동자 모집 사무소를 설치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연방고용청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연방고용청이 직업 숙련도 확인, 의료검사, 경찰기록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자를 선별했다. 노동자들은 단체로 서독에 들어왔으며, 사용자들은 이들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거처를 제공해야 했다. 채용과 근로조건, 사회보장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송출국 간의 양자협정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후 1973년 11월 연방정부는 초청노동자 모집을 중단했다(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p. 184.).

56) 오정은, “독일 통일이 이민정책에 미친 영향: 동·서독 인구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관계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7(2018), p. 6.

57)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2_March_1968,” 『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4: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8_01-03(2)』(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p. 249.

"우리는 전쟁에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혁명과 승리를 위해 일하고 있었으며,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이 점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 지도자, 과학자, 기술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 개인은 전쟁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59]

1950년대 이후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베트남인들의 동독으로의 이주는 본격적인 노동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0] 즉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후 국가의 재건을 위해 북베트남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학생이나 견습생, 인턴 등을 다수 파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동독 정부 역시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제국의 유학생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과 소련 사이에 최고지도자 간 회담 및 1967년의 임업 협정 체결과 노동자 파견 등 활발한 교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1960~1970년대 기간 동안에도 베트남 북부를 통치하고 있던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베트남)에서, 1976년부터는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동독에 도착했다. '연대가 승리를 가져온다'('Solidarity brings victory') 이니셔티브를 통해 총 42,000여 명의 베트남의 학생과 연수생, 인턴들이 동독을

58) Christina Schwenkel, "Socialist Mobilities: Crossing New Terrains in Vietnamese Migrat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Migration Review*, Vol. 4, No. 1(2015), pp. 18-20.

59) *Ibid.*, p. 19. (저자 강조)

60) 실제로 베트남 정부가 1980년대 소련 블록 국가(주로 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다수의 양자 노동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문화를 잘 아는 훈련된 전문가, 즉 해당 국가의 유학생 출신들이 다시 유학했던 국가로 돌아가기도 했다. 동독으로 돌아가 일하면서 '그루펜라이터'(Gruppenleiter, 그룹 리더)로 선발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다(Christina Schwenkel, "Socialist Mobilities: Crossing New Terrains in Vietnamese Migration,", p. 20.).

방문했다. 또한 1966년부터 1972년 사이에는 베트남에서 2,639명의 인턴과 9,400명의 연수생이 동독으로 왔다.[61]

이후 북베트남군은 1975년 마침내 남베트남 정부의 수도인 사이공(Saigon)을 점령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베트남을 전역을 공산화하는데 성공했다. 1년 후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한다. 과거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다수의 사회주의 형제국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베트남의 도시 재건에 참여했다. 같은 해 베트남 정부는 강제적인 '마오쩌둥식(Maoist style)' 산업 국유화를 전격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500개의 사영기업을 650개의 국영기업으로 재편하였는데, 소유권을 빼앗긴 자본가의 절대다수는 중국-대만계였다. 또한 1979년에는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중국이 지지하던 폴 포트(Pol Pot)[62] 정권을 무너뜨리는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서방과 중국의 지원이 단절되자 베트남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 1978년 가입한 CMEA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63]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베트남에서 대규모 인원이 이주 노동자 신분으로 동독에 갔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제3절 1980년대: 노동 협정 체결과 '계약 노동자'

1980년 이전에 수천 명의 베트남인이 동독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1980년 4월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베트남 출신 계약직 노동력의 활용은 시작되지 않았다. 원래 5년 동안 유효했던 이 협정은 근로자의 본국 송환권 등의 문제에 대한 동독과 베트남 정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1987년까지 갱신이 지연되었다. 개정된 협정에 따라 동남아인들은 1980년에 허용되었던 것보다 1년

61) Ann-Julia Schaland · Antonie Schmiz, "The Vietnamese diaspora in Germany,"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2015), p. 8.

62) 본명은 살롯 사(Saloth Sâr).

63) 채수홍,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아시아리뷰』, 제12권 제3호(2022), pp. 15-16.

더 긴 5년 동안 동독에 체류할 수 있었다.[64]

이들은 서독에서 당시 터키, 그리스인 및 기타 '이주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인 'Gastarbeiter'가 아닌 공식적인 협정에 따라 'Werktätiger'(일반 노동자) 또는 'Vertragsarbeiter'(계약 노동자)로 불렸다. 이는 사회주의 하에서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동독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단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독일인 동료들과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노동자들은 최대 3개월의 직무 및 언어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동독 사회에 깊이 통합되기는 어려웠다. 동독·베트남 간 상호 이익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 찬 프로그램 중 하나는 1980년대에 동독의 산업 중심지에 베트남 노동력을 정기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양국 간의 "형제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체결·시행된 노동 협정(Bilateral agreement on Vietnam laborers working and receiving professional training in GDR enterprises, 1980. 11. 4.)이었다. 1980년 양국 간 노동 협정 체결 이후 동독으로의 베트남 노동자 파견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인원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7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였다.[65]

1980년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81~1982년 기간에는 연 파견인원이 4,000명을 상회하였다.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20,000명에서 30,000명이 넘는 인원을 파견하며 최고치를 나타낸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에도 파견된 베트남 노동자는 9,000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의 10년의 기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약 12,00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동독으로 떠났다. 이들은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로서 전문적인 현장 교육을 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새로 습득한 지식과 자격을 사회주의 산업발전에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이주하였다. 협정이 개정된 해인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기간에는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인

64) Mike Dennis, "Working under Hammer and Sickle,", p. 340.

65) Christina Schwenkel, "Rethinking Asian Mobilities,", pp. 243-244.

약 60,000여 명의 베트남인이 동독으로 이주했다. 이 시기 주된 초점은 저숙련, 생산 중심의 대규모 노동력에 맞춰져 있었다.[66]

<표 3-1> 동독으로 파견된 베트남 노동자 인원, 1980-1990

연도	인원
1980	1,534
1981	4,027
1982	4,740
1983	644
1984	668
1985	248
1986	135
1987	20,448
1988	30,567
1989	8,881
1990	53
합계	71,945

* 출처: Mike Dennis. "Working under Hammer and Sickle: Vietnamese Worker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80-1989," *German Politics*, Vol. 16, No. 3(2007), p. 340.

앞서 이주에 관한 이론의 측면을 적용하며 살펴보면, 파견 초기에는 CMEA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교류 및 서구권과의 체제경쟁의 측면에서 이뤄진 상대적으로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베트남의 인적자본의 형성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대규모 파견의 경우 동독의 흡입 요인(노동수요 증가)을 통한 베트남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이 이루어졌다. 분절노동시장 이론을 근거로, 현지에 파견된 베트남의 계약 노동자들은 동독 현지인들이 종사하기를 꺼려하던 2차 부문 사업에 주로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계약 노동자들은 의류 공장, 신발 공장, 자동차 공장, 세탁기 공장 등 경공업 공장

66) *Ibid.*

에서 일하거나, 도로를 건설하고 금속을 제련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조립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인력에게 선진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계약 노동자를 데려왔지만 실제로는 동독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어렵고 단조롭고 위험한 일에 투입되었다.[67]

<그림 3-1> 로스토크의 베트남인 노동자들



*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B%8F%85.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 원본 제공(검색일: 2024년 6월 22일).

또한 1980년 협정은 베트남 계약 노동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최대 30마르크의 월 임대료를 내고 호스텔에 기숙사 같은 숙소를 배정받았다. 이들은 원하는 대로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지만, 호스텔 출입과 동독 외부 방문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와 동독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가 제한되었다. 호스텔 규정을 위반하면 항소할 권리 없이 베트남으로 추방될 수 있었다.[68]

67) 최윤영,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p. 23.

<표 3-2> 1980년 협정의 주요 불이익 조항

분 야	내 용
정치적	· 정치적 활동 시 추방 · 단체 결사권 불허 · 동독의 모든 정당 가입 불허
경제적	· 베트남 정부에 임금 총액의 12% 납부
사회적	· 동독 기관과 대사관의 엄격한 감시 ·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각종 복지 기금 납부 · 동독 노조연맹(FDGB) 의무가입 및 가입비 납부
기타 (가족)	· 가족 동반 불허 · 임신 시 추방 또는 낙태

* 출처: 윤용선, "독일 베트남 이주민: 교육과 이주민 통합," 제47집(2013), p. 207. 내용을 저자 재정리.

1980년 4월 11일 동독과 베트남 간 체결된 협정 및 이후 1987년 7월 1일에 개정된 협정에 베트남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및 거주에 관한 기본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다른 측면들은 국가기관과 공장 운영 그룹에 의해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규제되었다. 5년간 유효했던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매년 개정안을 통해 수정했으며, 1987년 개정 전까지 노동 계약은 일반적으로 4년으로 제한되었다. 영주권과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69]

동독에 계약직 노동자로 파견된 아들과 딸의 경제적인 관계로 이익을 본 것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척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계약직 노동자를 파견함으로써 베트남은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자녀 지원 기금 등 명목으로 노동자 1인당 총 180 동독 마르크를 지급받았다. 또한 계약직 노동자의 월 세전 소득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베트남 조국의 발전과 방위를 위

68) Mike Dennis, "Working under Hammer and Sickle,", p. 344.
69) *Ibid.*, p. 343.

한” 기부금으로 동독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 기록 보관소의 문서에 따르면, 1987년 한 해에 베트남 정부는 동독에 있는 자국 노동자들로부터 4,360만 마르크를 징수했음을 밝히고 있다.[70]

베트남 계약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경은 매우 다양했다. 베트남과 정부가 협정을 맺은 초기에는 전직 군인, 저항군의 후손 또는 군인의 미망인이 주를 이루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 말에는 모든 사회 계층의 노동자가 채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은 이는 노동자의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라 전문 부처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국가 노동 및 임금 사무국이 근로자 모집을 조정했다. 동독에서 필요한 근로자 수는 베트남의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다시 관련 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했다.[71]

동독에 머무는 첫 3개월 동안 모든 계약직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독일어 수업을 이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노동자를 더 빨리 배치하기 위해 교육 시간을 최대 3주까지 단축하기도 했다. 독일어 교육이 끝난 노동자들은 각자의 활동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72] 동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73] 가운데 베트남인의 숫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독일 민주공화국 700개 회사에 파견되어 전체 계약직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은 여성 노동자도 대거 파견했으며 주로 섬유공장에서 일했다. 동독 정부는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통제된 환경 속에서 주변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당초 그들이 원했던 목적인 노동력 제공에만 집중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일화들을 종합해 보면 독일인들은 베트남 동료들과 일하는 것을 편

---

70) Gertrud Hüwelmeier, “Socialist Cosmopolitans in Postsocialist Europe,”, p. 145.

71) Micha Rehder, “Zwischen zwei Welten: Vietnamesische VertragsarbeiterInnen in Rostock,”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2013), p. 22.

72) *Ibid.*, p. 24.

73) 이들은 대체로 켐니츠(Chemnitz), 드레스덴(Dresden), 에어푸르트(Erfurt) 같은 공업도시에 보내졌다. 1980년대 이후 약 20만 명의 베트남, 폴란드, 쿠바, 모잠비크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최윤영,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p. 23.).

안해 했는데, 이는 두 나라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비교적 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 노동자들은 재봉 기술이 뛰어나 노동력의 공백을 요긴하게 채울 수 있어 그만큼 높이 평가받았다.[74] 동남아시아 파트너는 원자재 및 상품 공급원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베트남의 계약직 노동력은 헝가리, 불가리아, 알제리에서 온 노동자의 공급이 고갈되면서 생긴 공백을 일부 메워주었다.[75]

제4절 1990년대: 독일 통일과 본국으로의 송환

비록 1980년대 말 소련 정부에서 내세운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도의 과감한 정치적 개혁[76]은 없었지만 '도이 머이(Đổi mới)'[77] 정책 시행 이후 베트남에서는 과거보다 개선된 정치적 자유가 조용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허용되었다. 1986년 12월, 베트남은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국가 관리 하에 개방적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였다.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경제적 부흥의 길로 접어드는 기초를 마련한 베트남 지도부는 일련의 쇄신 정책들을 통해 경제적 개방과 정치적 개선을 혼란 없이 동시에 성취하게 되었다.[78]

독일이 통일되었던 1990년 당시에 동독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통일된 독일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가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고향으로 되돌아온 노동자들이 마주친 베트남의 사

74) 카트야 호이어(Hoyer, Katia), 송예슬 역, 『장벽 너머』, pp. 434-435.

75) Mike Dennis, "Working under Hammer and Sickle,", p. 342.

76)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인 미하일 고르바초프(Михаил Горвачёв)가 주도했던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을 말한다.

77)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đổi)와 '새롭게'라는 의미의 머이(mới)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을 뜻한다.

78) 양운철,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4호(2011), pp. 1-32.

회경제적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송환 협정 체결 이후 베트남인들이 고국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고향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했다. 그러나 이미 베트남에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던 개혁개방의 여파로 이러한 격차는 점차 좁혀지게 되었으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역전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동독에서 5년간의 노동기간이 지나면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경제 개혁 정책, 소위 '도이 머이(Đổi mới)'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계약노동자들은 귀국 후 동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자영업을 위한 재정 및 물질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었다.[79] 자국에서 시행된 제반 개혁조치들은 귀국한 노동자들의 동독에서 생활한 기억 및 근로 경험과 결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파견된 계약 노동자들이 주로 단순노무・저숙련 직종에 종사하였던 점[80]을 감안하면 이들이 동독에서 습득한 노동경험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 베트남의 시장에서 크게 우위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동독으로 나가 몇 년간 벌어들인 수입은 일정기간 동안 그들을 베트남의 고향에 있는 친지나 동료들에 비해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지속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으며 오래지 않아 해외파견을 경험하지 않은 그룹과의 구분 역시 어려워졌다. 이들과 비교되는 그룹으로는 학생신분으로 동독에 유학을 가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경우가 있다. 단순노무에 종사했던 노동자 그룹과 다르게 이들은 사회주의 선진국이었던 동독에 가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 직종 분야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마친 학생들은 베트남으로 귀환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에 앞장섰다.

개혁주의 정책 시대에 공산주의 베트남이 주요 정치적 변화에 저항하면서

---

79) Lam Huyen Trang Stephanie, "아시아계 노동자의 독일 이민과 통합: 파독 한인 간호사와 베트남 계약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pp. 42-43.

80)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규모 파견이 이루어졌던 2차시기 이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제를 개방하는 동안, 독일에서 40,000명이 귀국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처럼 보였다.[81]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동독 정부는 사라졌음에도 베트남에서 온 계약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독일에서 망명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베트남 입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자발적으로 귀국을 선택한 자국민에게만 입국을 허락했다. 동독 내 베트남인들이 가졌던 초기의 낙관주의는 얼마 안 있어 망명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함으로써 점차 사라졌다. 점증하는 외국인 혐오 분위기와 더불어 기숙사의 폐쇄로 인해 많은 계약노동자들이 추가로 귀국길에 올랐다. 1993년 5월 14일 주 내무장관 회의는 과거 동독 계약노동자의 체류와 관련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4월까지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기한의 체류가 인정되었다. 다만 체류 허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82]

<표 3-3> 구동독 노동자에 대한 체류 허가 조건(1993)

분 야	내 용
망명 제한	망명 신청 절차는 1993년 12월 17일까지 종결되어야 함. 이미 제출된 망명 신청은 1994년 4월 17일까지 취소해야 함. 이는 망명 신청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함.
전과(前科)	전과(예: 불법 담배 판매 등)가 없어야 함.
복지 수급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입국・체류	1990년 6월 13일 이전 동독에 입국한 계약 노동자에 한하며, 그 사이 체류가 중단된 적이 없어야 함.

* 출처: 윤용선, "독일 베트남 이주민: 교육과 이주민 통합," 제47집(2013), p. 210. 내용을 정리하여 재작성.

81) Matthias Maass, "'Soft' Coercive Diplomacy versus Informal Resistance: Attempts at Deporting 'Illegal Vietnamese' from Reunifying Germany, 1990-1995,"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Vol. 9, No. 3(2014), p. 233.

82) 윤용선, "독일 베트남 이주민: 교육과 이주민 통합,", p. 209.

통일이 되면서 이들 계약 노동자는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기숙사에서 퇴거당했으며, 또한 독일 통일 사회에서 일어난 외국인 증오 및 적개심과 마주쳐야 했다. 그 결과 많은 외국인들이 귀국하여 1만 5,000명의 베트남인과 5,000명의 앙골라인과 모잠비크인만이 독일에 남았고, 이들은 꽃가게, 아시아 식품점, 옷감 가게 등 소매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통일이 되고 7년이 지난 후에야 이들을 위한 정식 체류허가가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이들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었고 이미 대부분은 동독을 떠난 뒤였다.[83]

동독에 대규모로 파견되어 있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동독 시절에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사회주의 동지'라는 점 때문에 장벽 너머의 자본주의자들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는 이들에 대한 동독인의 인상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84]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이후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동독 지역의 산업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고 파산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동독에 있던 베트남의 계약노동자들 역시 타격을 받게 된다. 더 이상 국가 간 노동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상당수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다. 1990년 통일 협정에 따르면 동독의 계약직 노동자는 원래 체결한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었지만, 파산 위기의 기업들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거주하던 호스텔에서마저 떠나야 했다.[85]

제5절 소결

1950년대 중반 베트남의 어린이들이 동독으로 건너간 '모리츠부르거'를 시작

83) 최윤영,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p. 24.

84) 위의 책, p. 5.

85) 손어진, "보트피플(서독)과 손님노동자(동독)로 온 베트남 이주민," 『일다』, 2023년 11월 12일; https://www.ildaro.com/9765(검색일: 2024년 5월 20일).

으로, 마치 과거의 한국전쟁처럼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수많은 인턴과 견습생들이 그들의 형제국이던 동독으로 떠났다. 베트남 정부는 어린 학생들과 견습생들을 사회주의 선진국인 동독으로 보냈고, 동독에서 교육받고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배웠던 베트남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섰다. 이주 이론의 고전적 시각에서 양국의 본격적인 '배출-흡입' 관계는 1980년의 정부 간 협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이후 전후 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동독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사회주의권의 노동력 이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의 인구이동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 간의 노동력 이동은 당사국들 간의 자발적이고 완전히 평등한 관계 위에 기초를 둔 상호협력과 상호원조의 한 형태라고 보며,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정치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단합을 고양시키고, 당사국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각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인력이동은 협력 당사국들 간의 상호이해관계, 전문가에 의한 도움, 국가 기술요원의 훈련, 일부 국가의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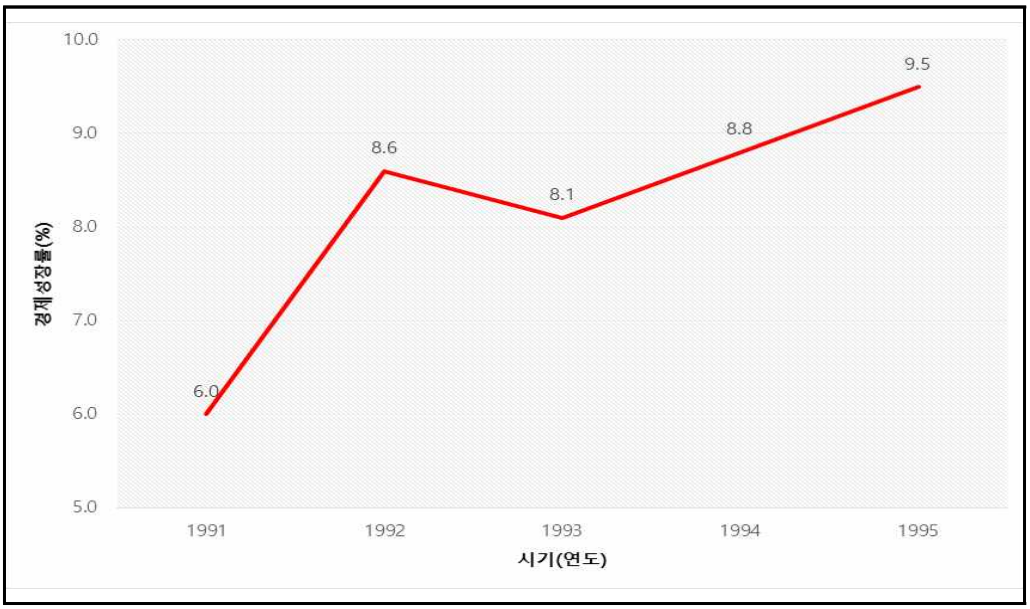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독과 베트남 간에 이뤄진 노동자 파견 역시 최초에는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친선 혹은 우호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경제 진흥에 목적을 둔 대규모 노동력 파견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변화는 소련에 파견된 북한의 임업 노동자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형제국 베트남을 상대로 독일민주공화국의 노동력 수입 정책의 변화 요인은 변화된 모스크바의 정책에서 기인하였다. 1981년 소련은 기존의 합의를 깨고 독일민주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석유의 공급량을 1900만 톤에서 1700만 톤으로 10% 포인트 넘게 줄였다. 줄인 만큼의 물량은 공개 시장에 내다 팔아 자국의 경제문제를 꺼트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동독 번영의 희망이라 본 '우정(дружб

86) 이채문, "남북협력시대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노동력의 상황과 정책과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2001), pp. 213-214.

a)' 송유관은 순식간에 우스워졌다.[87]

자국 기업의 국영화에서 촉발된 비효율성과 1979년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베트남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는 CMEA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동독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 역시 부족한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1986년부터 시작된 도이 머이 정책을 통해 자국 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자 했다. 개혁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수치를 도출해 낸 것은 아니었으나 대외개방 정책을 선택한 베트남의 경제는 점차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림 3-2> 탈냉전 이후 베트남 경제성장률, 1991~1995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국제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 작성.

동독은 1960년대 폴란드, 헝가리 등의 형제국들과 협정을 통해 노동인력을

87) 카트야 호이어(Hoyer, Katia), 송예슬 역, 『장벽 너머』, p. 473.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노동력 수입을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한 자국 산업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동독과 베트남 간의 교류가 이미 1950년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초기에는 사회주의 특유의 지배적 이념, 즉 국제주의 혹은 형제적 친선과 우호를 내세워 진영 내 결속을 공고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초기 베트남인 학생이나 인턴, 견습생들이 다수 동독으로 건너갔던 것은 이러한 사회주의 연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제4장 구소련 지역 북한 이주 노동자

제1절 개관

한민족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은 구한말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나, 북한 노동자가 처음 러시아에 파견된 것은 1945년 소련의 북한 주둔 직후였다. 이후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역사적으로 대개 다음 세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첫 단계는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초의 시기로 소련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소련 측 요청에 따른 파견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 소련으로 건너갔던 북한의 노동자들은 주로 어로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극동과 사할린 일대에서 어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노동자 파견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에 기존 노동자들의 송환과 함께 파견 역시 재개되었다.

두 번째는 1967년~1990년대 초 북한과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련의 정책적 북한 노동자 초청 시기이다. 소련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로써 별다른 대립 없이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독재자였던 스탈린 사후 새롭게 서기장으로 선출된 흐루쇼프를 중심으로 소련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격하 운동을 중국의 지도자인 마오쩌둥(毛澤東)이 수정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자신이 공들여온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북한 역시 노동력 송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이주 과정에서 주요한 변화들이 드러난다. 먼저 노동자를 파견하고 현지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가 차원의 통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다음으로는 노동자들의 직종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림업노동자'로 불리는 자들로, 주로 벌목 작업장에서 일하게 된다.[88]

<표 4-1> 소련 노동력 현황, 1970~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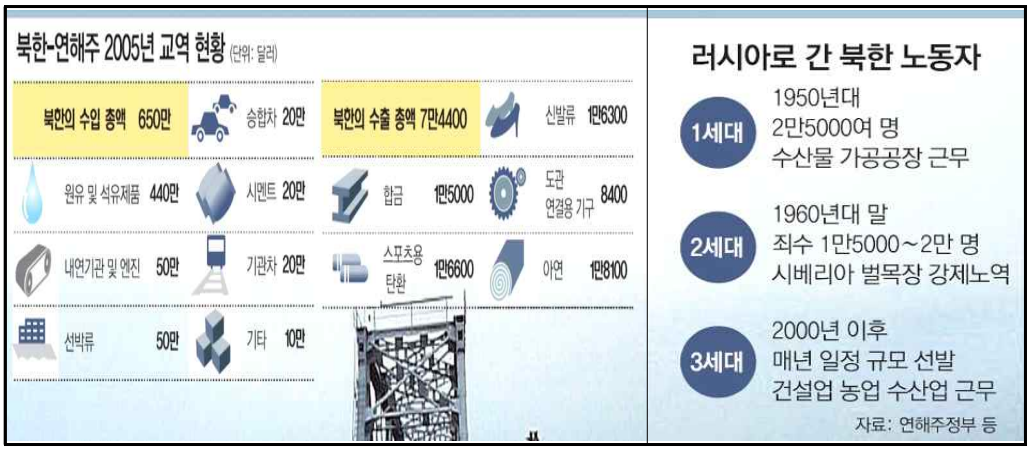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총 노동력	**75.4**	**81.4**	**86.1**	**86.4**	**86.5**	**86.3**
취업자	62.6	68.0	73.3	74.9	75.3	73.8
학생	5.4	6.5	6.6	5.8	5.6	5.6
비경제 활동인구	7.4	6.9	6.2	5.7	6.9	6.9

* 출처: 통계청(1995), 「러시아 주요경제사회지표」, p. 67.

세 번째는 1990년대 중반~2007년으로 소련 붕괴 후 북·러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노동자 파견이 정체를 보인 시기이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는 극동지역 및 러시아 전역에 북한 노동자의 파견이 다시 확산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종사 분야가 다양화되었다.[89]

<그림 4-1> 북한-연해주 교역(2005) 및 북한 노동자 현황



88) 이미 1950년대에도 소련 정부는 하바롭스크 지역 일부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북한 측이 파견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얻도록 한 바 있었으나,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89)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pp. 37-38.

* 출처: “北간부에 한 달 봉급 바쳐야 일자리… 환전 때 또 뜯겨,”『동아일보』, 2009년 9월 29일.

한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변천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란코프(Lankov)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이주의 역사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각 시기마다 각각 고유한 조직 모델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90]

<표 4-2>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이주 변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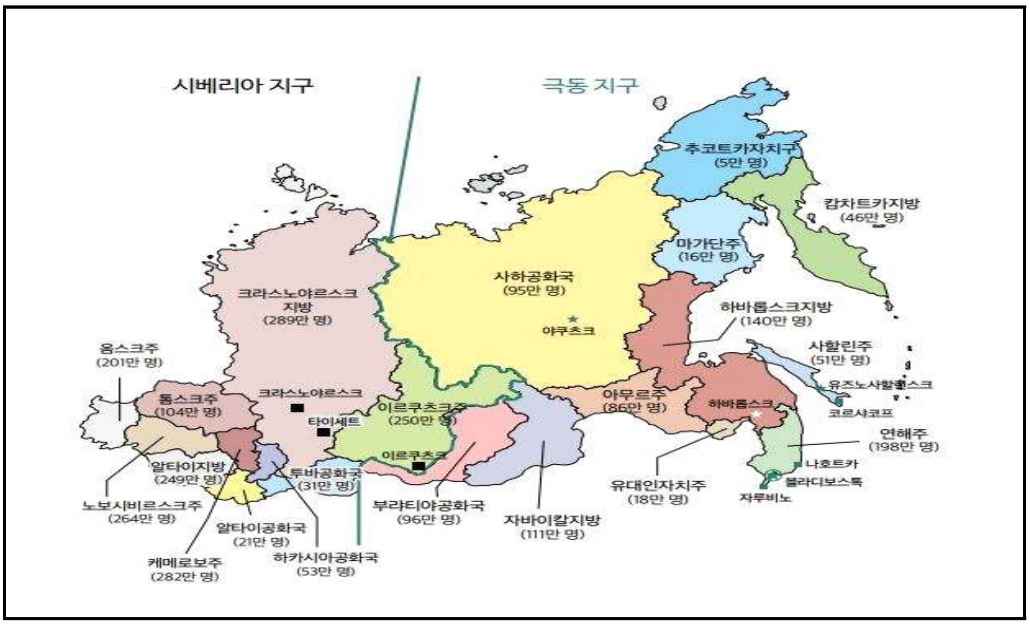
분류	특징	주요 내용
1946년 모델	수산업을 위한 조직적 채용	· 초기 북한 정부의 개입 최소화, 소련의 내부 노동력 모집 관행을 북한 지역에 적용 · 자발적인 채용, 높은 임금과 다양한 혜택으로 노동자들의 가입을 독려(1930~1970년대 광활한 시베리아·극동지역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 · 임금 직접 지급(노동자들은 수입의 50%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수령)
1967년 모델	벌목과 캠프 생활	· 노동자들에게 자율성을 거의 부여하지 않는 양국 간 상호 작용을 제안, 대부분 혜택은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전달 · 계약 기간(3년) 동안 군대식의 고도의 규율과, 현지에 파견된 보위원 등을 통한 당국의 지속적 감시를 받으며 생활 · 1967~1984년까지는 본국에서 고품질 상품을 구매 가능한 돈표(은행증서)를 임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월 100루블의 고정임금 지급 시작(1984~1985년)

90) Andrei Lankov. “North Korean Labor Export to the USSR/Russia,”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18, No. 3(2020), p. 155.

2000년 모델	건설 현장과 높은 자율성	・러시아 측은 국가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필요한 계약은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 체결(시장경제로의 전환) ・북한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근로조건을 협상('청부' 활동 종사 포함) ・탈출・불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평양)・성분(준특권층) 등을 고려하여 선발 ・근로자와 중개인이 주로 도급제 형태로 임금을 협상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출처: Andrei Lankov. "North Korean Labor Export to the USSR/Russia,"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18, No. 3(2020)의 기준과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도



* 출처: 외교부: http://www.mofa.go.kr. 2021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개황(작성일 : 2021-10-18).

제2절 1946년~1967년 이전: 조직적 채용과 근로실습

북한 노동자의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 현상은 이미 1945년 소련군이 한반도 북쪽에 들어온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과 소련 간에 행해진 노동 협력의 형태는 시기별 종사 분야 및 국가 간 자율성, 모집과 통제의 형태·방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소련의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련 당국은 마치 자국민의 노동력을 모집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를 선발·배치하였다.

초기 북한의 노동자가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업과 목재업이었으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후 다시 재개되었다. 이 형태는 본질적으로 소련 내부의 노동력 모집 관행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공식 용어로는 '오르그나보르(оргнабо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직적 모집(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набор)'이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어의 약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행은 소련의 국가기관이 종종 외딴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맡기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946년~1949년 기간 파견된 노동자 수에 대한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대다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노동자 파견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계약이 끝난 노동자들 역시 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북한으로 송환이 재개되었다. 소련의 극동 지역이 낙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주민들에게는 그들의 고향보다 여전히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현지 여성과의 결혼 등을 통해 정착을 시도하기도 했다.[91]

1946년을 시작으로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유입은 실질적으로 1948년에 종결되었다. 사할린 지역으로의 파견 규모는 모두 2만 891명이었으며 연도별 유입과 유출 현황은 <표 4-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할린 각지의 수

91) Andrei Lankov, "North Korean Labor Export to the USSR/Russia,", pp. 157-159.

산업 관련 작업장에 배치된 파견노무자들은 현장에서 현지 업체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배치를 받은 노동자의 대부분인 85% 가량이 어획 및 어류 손질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노무 분야의 현장 노동종사자들로 확인된다.[92]

<표 4-3>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 유입·유출, 1946~1949

연도	유입			유출		
	총수	그중		총수	그중	
		노동자	동반가족		노동자	동반가족
1946	7,523	7,523	-	6,595	6,595	-
1947	6,474	5,083	1,391	-	-	-
1948	11,888	8,105	3,783	5,406	4,113	1,293
1949	180	180	-	2,394	1,678	716
합계	26,065	20,891	5,174	14,395	12,386	2,009

* 출처: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p. 50. (재인용)

한편 베트남의 학생과 견습생들이 유학이나 실습을 위해 동독으로 건너갔던 것과 유사하게 이 시기 소련에서는 북한 유학생들의 근로실습(work-study)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해방 이후 소련의 원조로 지급된 기계와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학생들을 소련에 보내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소련의 대학 교과과정은 도제(徒弟) 제도 등을 통해 학업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습참가자들은 일정한 임금을 지불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북한의 학생들은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관에 소속되어 연수생 신분으로 노동을 했던 것이다.[93]

1950년 6월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이미 1951년이 되면 고착상태에 이르렀으나, 포로 송환 문제 등 주요 조항에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된다. 결국 전쟁 발발 후 3년이 지난 1953

92)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pp. 49-51.
93) 통일부, 『北韓實態』(서울: 統一部, 1998), p. 141.

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 후 북한의 전 국토는 1945년 8월의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형제적 관계의 도움, 혹은 반제국적 연대를 앞세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원조에 나섰다. 소련은 1953년 8월 3일 북한 부흥을 위해 10억 루블을 무상원조하기로 결정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원조대상을 분담했다. 정전과 함께 시작된 평양의 부흥은 소련이 맡기로 했다. 제2의 도시인 함흥은 동독이 담당했다. 1954년 11월 동독의 제1진이 함흥에 도착했으며 최종적으로 188명의 팀이 구성되었다. 함흥 재건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3억 6,000만 루블에 달했다.[94] 이주체계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전후 원조는 소련과 북한 사이에 정치적·경제적 유대 혹은 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 노동력 송출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전후 복구사업이 한창이던 1957년 북한과 소련은 하바롭스크 지역 내에서 1957년부터 1962년까지 북한의 국가 경제를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침엽수 2천만㎥ 분량의 목재를 채취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련을 위해서도 벌목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조건에 따르면 북한을 위한 목재 1㎥ 대비 소련을 위해서는 1.33㎥ 규모를 운송해야만 했다. 1957년 7월 25일 북한 주민 3,550명이 하바롭스크에 도착했고, 그 중 대부분인 3,454명이 콤소몰스키와 셀리킨스키 목재농장(Комсомольский и Селихинский леспромхозы)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벌목(909명), 거주를 위한 주택 건설(778명), 벌목 준비 작업(457명) 등 유형의 작업에 배정되었고, 일부 기술직과 사무직(90명)으로 고용되기도 했다.[95]

제3절 1967년~1980년대: 임업 협정과 '벌목 사업소'

94)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남기정 역,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서울: 창비, 2014), pp. 109-110.

95) L. A. Krushanova, *Migration Policy in the Far East of the USSR, mid-1940s–1970s* (Vladivostok: IHAE FEBRAS, 2014), p. 233.

196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에는 북한의 대소련 노동력 송출 직종 및 형태에서 주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북한은 광산·철도·건설·가구제조 부문에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1967년 3월 소련과 '조-쏘 원동 산림자원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소련 내 하바롭스크, 비로비잔, 체그도민, 틴다, 티르마, 엘가, 우쉬만 등지에 벌목공을 파견하였다. 파견 인력의 규모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정하지는 않지만, 증언에 따르면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까지 2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96] 다만 북한 주민들은 벌목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씨비리[97] 림업노동자' 또는 '러시아 림업노동자'라고 부른다.

<표 4-4> 북한-소련(러시아) 간 임업 협력 연혁

시기	협정	내용·성과·문제점
1957~1964년	1) 벌목에 관한 협정 (1957~1962) 2) 同 협정 유효기간 연장(1962~1972)	1) 하바롭스크 지역 내(150만 입방미터) 침엽수 벌채 권한 북한에 무상 제공 2) 1964년 이후, 북한 측의 기준 위반 등 사유로 인해 벌목사업 중단
1967년	북·소 임업협정 (1967년 체결, 1975년 벌목량 확대협정 서명)	1) 소련 측, 북한과 협력으로 시베리아·극동지역 삼림개발의 어려움(기후조건, 노동력 부족, 설비 낙후 등) 극복 2) 북한 측, 노동력 제공을 통해 자국의 상업용 목재수요 60%를 충족
1991년	벌목에 대한 북·러 간 새로운 의정서 체결	1) 벌목량은 과거와 동일하나 북한 측 분배비율 감소(35.5%) 2) 벌목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을 엄격히 규정, 북한 측 남벌 방지 목적

* 출처: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 중 제2장의 임업협력 부분을 발췌하여 표로 정리.

96)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e북: 도서출판 오린, 2019), p. 176.

97) 시베리아의 러시아어 원어 표기인 씨비리(Сибир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64년 중단되었던 북한-소련 간 벌목사업은 1967년 3월 2일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에 의해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있기 전인 1966년 6월 20일의 양국 간의 회담에서 이미 위 회담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8]

"**양국은 소련영토내에서 북한정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 벌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협의하였고 1968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소련측은 현재의 북한-소련간의 무역합의의 조건에 따라 1970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업용 목재를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99]

1967년 3월, 위 회담에서 언급한 벌목 사업 재개를 위한 논의 일정을 1년 정도 남겨두고 있던 시점에서 북한과 소련 각국 정부대표단 간의 회담을 통해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등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3월 4일자 로동신문 보도에서는 '형제적쏘련인민', '형제적친선', '형제적조선인민' 등을 강조하며, 앞서 검토에서 동구권 국가의 노동력 송출 배경으로 지목한 양국간 친선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쏘련정부대표단간에 진행된 회담의 결과 2일 모스크바에서 조선과 쏘련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와 1967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협정들이 조인되였다.

오찬회에서 김일제1부수상과 까. 떼. 마주로브제1부수상이 연설하였다. **김일동지는** 연설에서 쏘련체류시에 **형제적쏘련인민이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여주었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쏘련인민의 두터운 우의와 형제적 친선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하였다.

---

98) 통일부, 『北韓實態』(서울: 統一部, 1998), p. 110.

99) 위의 책, p. 146. (저자 강조)

까. 떼. 마주로브동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하에 **형제적조선인민이 나라의 경제, 문화 발전에서 계속 이룩하고있는 커다란 성과들은 쏘련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이 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로동당의 국제적위신을 높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끝으로 쏘련공산당과 쏘련정부와 쏘련인민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형제적조선인민과의 공고한 동맹을 부단히 강화**할것이며 쏘련인민이 조선인민의 성실한 벗으로 항상 있을것이라는것을 확인한다고 말하였다."[100]

1967년 3월 6일자 보도에서는 2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소련측 정부대표단의 구성원을 눈여겨볼만한데, 기사에 따르면 '쏘련림업팔프제지및목재가공공업상' 및 '쏘련어업성 제1부상'이 회담에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혔듯 양국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에 의해 벌목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임업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일동지와 대표단 성원들은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기간에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동지,** 쏘련 내각 수상 아. 엔. 꼬씌긴동지와 **친선적담화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대표단은 **조선과 쏘련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쏘련측에서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쏘련 내각 제1부수상인 위원이며 쏘련 내각 제1부수상인 까. 떼. 마주로브 (대표단 단장),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쏘련 내각 부수상인 웨. 엔. 노비꼬브, **쏘련공산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이며 쏘련림업팔프제지및목재가공공업상인 엔. 웨. 찌모페예브**, 쏘련 내각 국가대외경제련락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 웨. 아르히뽀브, **쏘련어업성 제1부상 웨. 엠. 까멘께브**, 쏘련미외무역성 부상 이. 떼. 그리쉰, 쏘련 내각 국가대외경제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떼. 에쓰. 씨도로비치, 쏘련외무성 참의원 엔. 게. 쑤다리고브가

100)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자기 사업을 마치고 조국을 향하여 출발," 『로동신문』, 1967년 3월 4일. (저자 강조)

회담에 참가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쏘련정부간에 조인된 문전이 조선인민과 쏘련인민간에 조인된 문건이 **조선인민과 쏘련인민간에 력사적으로 형성된 형제적친선과 전면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것**이며 사회주의 진영나라들의 통일과 위력을 강화하는 공동위업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101]

3월 6일자 로동신문 역시 마찬가지로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형제적 친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배경에는 이들이 공유했던 공통된 이념과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67년 체결된 협약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소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과거 후원국인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며, 고도로 권위주의적인 북한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성격이 반영됨에 따라 이 협정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자율성을 거의 부여하지 않는 두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제안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익이 북한 당국으로 바로 전달되었다.[102]

이와 같은 벌목 분야의 협력 사업은 양국의 입장에서 상호 호혜적인 사업이었다. 러시아 전체의 원목수출량에서 40%를 차지하는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혹독한 자연 기후적 조건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낙후된 설비 때문에 삼림개발의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북한과의 협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자국의 노동력 제공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업용 목재수요의 60%를 충족할 수 있었다.[103] 소련이 제공한 기계, 장비, 삼림에 대한 대가로 목재는 61:39, 펄프용 칩은 56:44의 비율로 소련과 북한 간에 분배되었다.[104]

---

10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련간의 경제과학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회담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7년 3월 6일. (저자 강조)

102) 1967년 소련과 북한 간에 새롭게 체결된 '임업 협정'으로 북한의 임업 노동자 3,500명이 이주하게 되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실적에 따라 북한의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 북한돈 300~800원을 돈표로 받으면서 일했다(이원웅, "북한 해외근로자, 어떻게 사나?," 『통일한국』, 2013년 12월호.).

103)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p. 275.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소련으로 파견한 노동자는 탈선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을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소련 내에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은 자국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정책을 수정한다. 북한은 당 조직생활과 근무태도를 반영하는 한편, 조선직업총동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 직능별로 모범이 되는 사람을 당 추천방식으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벌목노동인력에 관한 선발은 각 시·군당에서 주관하여 공장과 기업소에 모집인원에 관한 공문을 내려 보내 선발하였다. 1980년대에는 1년에 3,000명 정도를 선발하였는데 147개 군에서 20명씩 추천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모집 형태는 앞서 살펴본 베트남의 방식과 유사한 모습이다.[105]

<표 4-5> 하바롭스크로 이주한 북한 노동자, 1967~1974

단위: 명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도착	7,668	4,438	3,360	3,093	3,712	5,941	6,436	4,229
이탈	90	751	894	3,979	3,447	5,426	4,611	6,302
합계[106]	7,578	11,265	13,731	12,848	13,110	13,623	15,448	13,323

* 출처: L. A. Krushanova, *Migration Policy in the Far East of the USSR*, mid-1940s－1970s (Vladivostok: IHAE FEBRAS, 2014), p. 234.

임업노동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북한 통치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철저히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 최초 선발 단계는 지방 당 조직에서 관할하며, 이후 절차는 순서대로 시(혹은 군), 도(혹은 직할시)의 각 소관 부서별 담화 및 보위부의 승인까지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104) 마리아나 E. 트리구벤코 외,『북한경제와 남북한관계 전망: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본』(서울: 북한연구소, 1992), p. 110.

105) 심의섭·김종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p. 47.

106) 인원 합계에서 1970년과 1974년의 이탈 인원이 더 많은 것은 대부분 계약이 종료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각 시·군당은 매년 관할 공장 기업소에 선발 인원수(폰드)를 책정해 하달한다. 그러면 관할 지역 공장·기업소 당 조직에서는 시·군당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만큼 직장 내 조직생활과 사업에 충실한 당원과 사로청원(비당원)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45세 미만의 기혼자를 선발해 관할 시·군당에 올려 보낼 추천서를 써준다. 직장의 당 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구비서류(문건)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건은 자서전·신원증명서(성분관계)·생활평정서·신체검사서 등인데 자서전은 본인이 작성한다.[107]

시베리아의 가혹한 추위와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3년만 고생하면 2천 루블 정도를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소련은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파견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선발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당국에 의한 선발이라는 파견 방식과 일종의 충성자금 형태의 상납금 납부라는 불리한 계약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녹록치 않은 생활환경은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주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하도록 만들었다. 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분과 뇌물이었다. 1989년에 시베리아로 가서 벌목공 생활을 하던 중 탈출에 성공한 한 탈북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선발 당시 간부부장에게 1년에 냉장고 1대씩을 바치기로 계약한 덕분에 뽑힐 수 있었다고 한다.[108]

"나는 1982년 4월부터 넉 달 동안 두만강 초대소라는 곳에서 일했다. 청진의대 병원 의사로서의 파견근무였다. **십 수 년 전 벌목 취업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서로 가기 싫어해서 수형자(受刑者)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 중에 소련으로 도주하는 사람도 생기고 절도, 부녀추행, 보호동물 포획 등으로 소련 측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생겼다. 그러자 당국은 성분 좋은 노동자를 뽑아 보내고 임금도 루블화로 주기 시작해 지금은 벌목작업에 서로 끼려고 다툰다.** 그래서 두만강 초대소 의사들의 권한은 대단해졌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마지막 신체검사 관문인 초대소에서 불합격 판전을 받으면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109]

---

107)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p. 190.

108) 김양희, "저자와의 대화: 시베리아벌목장 탈출기를 쓴 장기홍," 『北韓』, 9월호(1993), p. 159.

이렇듯 파견 초기 극동지역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선발되는 것을 기피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해외파견에 선발되기 위해 뇌물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써, 이와 같은 모습은 노동력의 송출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유인이 점차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이념과 규범을 초월하는 모습이다. 즉 북한의 노동자들은 뇌물을 통해 해외로 파견되기를 희망하였다. 현지에서 비록 이입국의 국민들이 종사하기 꺼려하는 2차 부문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고국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의 임금을 받음으로써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 나은 생계를 보장하고자 이주를 선택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씨비리(시베리아)에서 일을 하는 로동자들은 **북조선에서 죄를 짓고 러시아에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이다. 북조선에서는 외국에 나가 일 하는 것만큼 큰 횡재는 없으며 또 이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없다.** 죄를 진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다 일을 시킨다면 북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여기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며 죄를 진 자는 모두 자유로운 세계로 달아나 버렸을 것이다."[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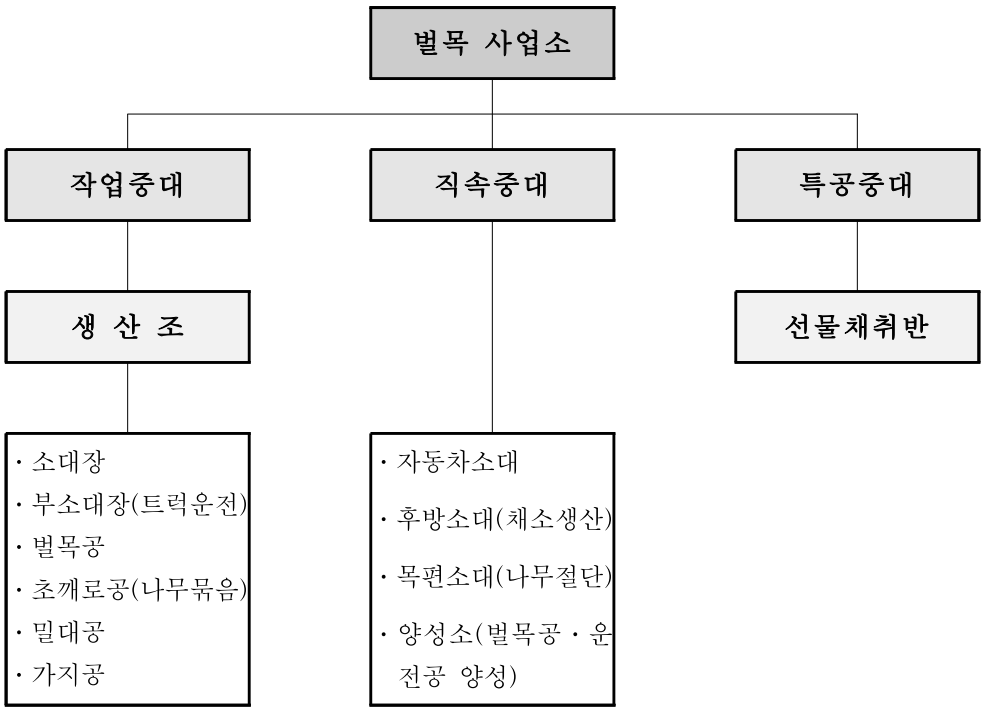
현지에 도착한 북한 이주 노동자들은 벌목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림 <4-3>은 북한 임업 대표부 산하 각 사업소 조직을 도식화한 것이다. 임업 대표부는 다시 제1연합과 제2연합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산하에 총 17개 사업소가 존재한다. 제1연합은 하바롭스크 내 체크도민(Чегдомын)에, 제2연합은 대표부에서 좀 더 떨어져 있는 아무르주 소재 틴다(Тында)에 각각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연합은 벌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8~9개가량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1연합소의 경우 티르마, 엘가, 체크도민, 우쉬만 등에 소재해 있다. 사업소는 각 임무 별 중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지 중대, 도로 중대, 운반 중대

109)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p. 194. (저자 강조)

110) 채학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정말 이럴 수가!』(서울: 연합통신, 1994), p. 233. (저자 강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실제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산지 중대에 속한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다. 벌목 작업은 소대별로 진행하는데 6명으로 구성된 소대원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3> 벌목 사업소의 구성 조직[111]



* 출처: 통일부, 『北韓實態』(서울: 統一部, 1998), p. 148.

111) 그림 <4-4>는 벌목 사업소의 구성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이광규 · 전경수, 『在蘇韓人: 人類學的 接近』(서울: 집문당, 1993)에 따르면 작업중대에는 5~6개의 생산조가 있으며 각 생산조에는 소대장, 트랙터 운전사인 부소대장, 벌목공, 나무를 묶는 초깨로공, 밀대공, 가지공 등이 있다. 이들은 식당차가 부설되어 있는 가건물 숙소에서 자고 여기에 부설된 식당차에서 식사를 한다. 직속중대에는 자동차중대, 채소를 생산하는 후방중대, 나무를 절단하는 목편중대, 벌목작업장내의 상점, 근로자를 감시하는 안전부, 그리고 벌목공과 운전공을 훈련시키는 양성소가 있다. 이외에 북한의 고위당국자들에게 바칠 선물로서 사슴, 멧돼지, 곰, 산양 등을 수렵하여 녹용과 웅담을 채취하는 선물채취반이 있다(통일부, 『北韓實態』, p. 147.).

벌목 현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천신만고 끝에 소련에 도착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영하 30도~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시베리아의 겨울과 맞닥뜨려야 했다. 벌목은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겨울철에 작업을 해야 나무의 물기가 빠져서 목재의 상품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땅이 얼어있어야 운반도 용이하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자연 조건이 좋은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벌목작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나무베기를 한다. 얼음이 녹는 4월 중순이 되면 벌목 작업은 거의 손을 놓는다.[112]

"그곳에 가서 **3년만 고생하면 2천 루블 정도 법니다. 북한 돈으로 8만 원 쯤 됩니다. 그러면 TV, 냉동기(냉장고), 녹음기 같은 것도 살 수 있고요**. 2년 정도는 암거래를 해서라도 쌀밥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로서는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나 시베리아로 갈 수는 없습니다."[113]

한편 페레스트로이카로 자유의 물결이 한창 무르익고 있던 1989년 소련에서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의 임업 노동자가 8년 만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소련 내에서 발생하는 북한 당국의 통제와 박해가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했으며, 인권 문제와 맞물려 소련 해체 전후 시기 몇 년에 걸쳐 소련과 북한 간 노동자 송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소련 신문들은 '체크도민에 있는 북한 감옥'이라는 제목의 고발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었다. 내용인즉, 이런 야만적 수용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었다. 그런 통제와 감시는 소련인들을 격분시키기 충분하였으며, **체크도민과 하바롭스크에서는 북한은 수용소의 포로나 다름없는 벌목 노동자를 철수시키라고 데모까지 일어나는 결과를 낳았다.**"[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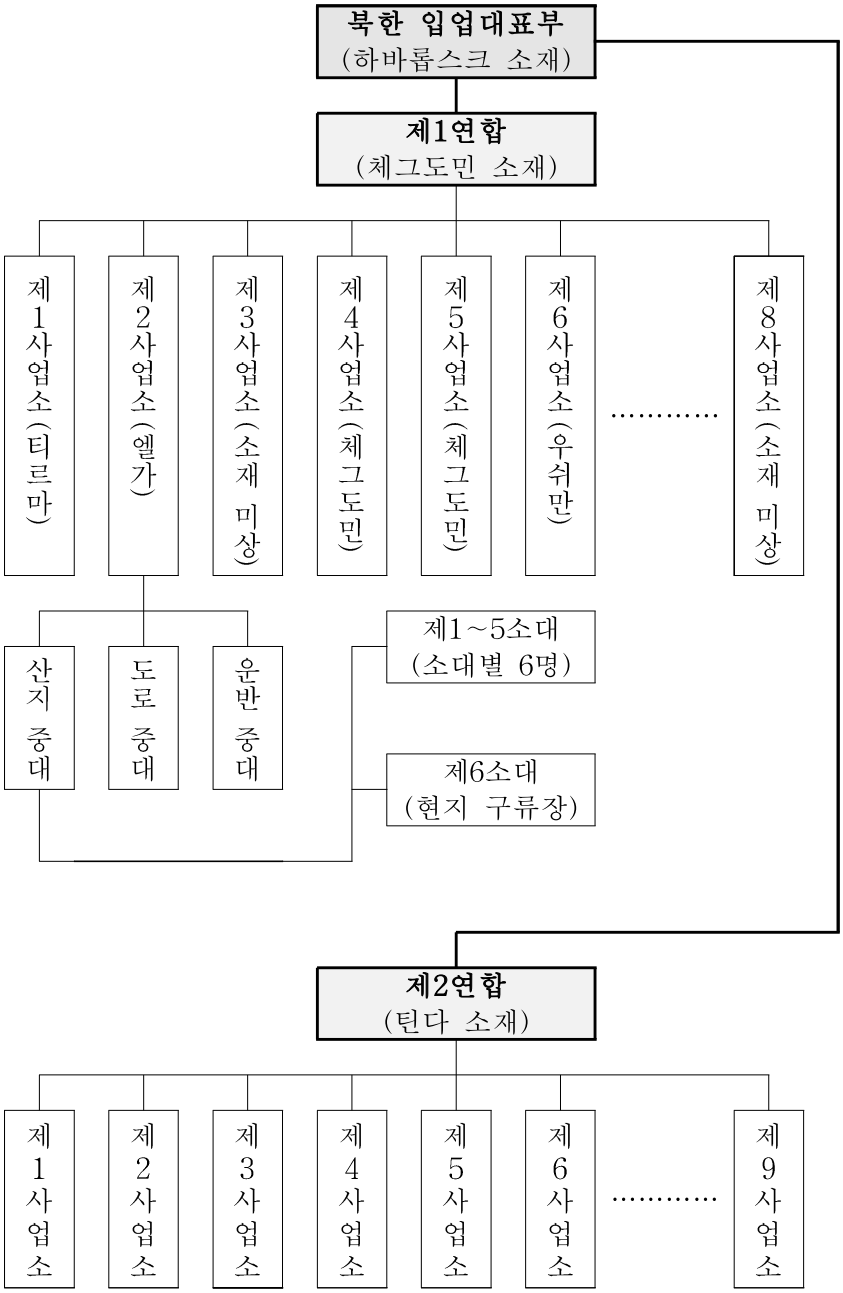
---

112)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p. 210.

113) 김양희, "저자와의 대화: 시베리아벌목장 탈출기를 쓴 장기홍,", p. 159. (저자 강조)

114) 장기홍, 『울음보가 터진 남자』(서울: 성심도서, 1993), p. 95. (저자 강조)

<그림 4-4> 북한 임업대표부 산하 각 사업소 조직



* 출처: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e북: 도서출판 오린, 2019), p. 202.

제4절 1990년대: 소련 해체 후 나타난 변화

인민이 평등한 공산국가 건설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험이었던 소련은 70년이 지나지 않아 1991년 12월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내 공화국들은 모두 분리·독립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독립국가연합(CIS)이라는 느슨한 연합체를 새롭게 결성하기도 하였다.[115] 소련의 정치적 유산과 국제적 지위 및 채무관계 등은 사실상 연방의 지배국이었던 러시아연방이 실질적으로 계승하게 된다. 소련 공산당을 내세운 일당체제는 무너졌으며 신생 러시아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한다.

대외적으로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1980년대 이후 한-소 수교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이미 상호 간 감정의 깊이가 드러나 있었다. 양국의 대내적인 상황 역시 노동자 송출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자국의 파견 노동자들이 소련 해체 후 나타난 자유주의의 물결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국내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다. 남벌을 비롯해 벌목현장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러시아 내 여론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녹록치 않은 경제적 사정은 상대방을 계속해서 필요로 했다. 동구권 블록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대외부문은 어려움에 빠졌고 대내적으로도 가난과 기근이 겹치면서 곧 겪게 될 고난의 행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이념과 관계없이 노동자 파견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를 포기할 수 없었으며,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 역시 계속 되었다. 아직 소련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인 1986년 당시 북한은 15개의 임업사업소에서 약 18,000명의 노동자가 하바롭스크, 체그도민, 치타, 엘가 등 극동지역에 진출했으며, 또한 벌목사업의 대

115) 국가연합은 둘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국가의 자격을 보유한 채 국제법상 평등을 기초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조약에 의하여 결합된 형태이며 이러한 사례로는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을 들 수 있다. 국가연합은 주권을 보유한 구성국들 사이의 조약이나 성문헌법에 준하는 연합규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가로 공동 벌채량의 약 40%를 소련으로부터 할당받아 국가경제에 충당하고 있었다.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겪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노동력의 이주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87년 3월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북한과 소련 간 임업분야 협조가 확대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정부사이의 림업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의정서가 2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림업부 김재률부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우리 나라 주재 쏘련대사 니꼴라이 슈브니꼬브와 쏘련정부림업, 팔프제지 및 목재가공공업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재률부장과 니꼴라이 슈브니꼬프대사가 의정서에 수표하였다."[116]

이후 두 나라 간의 임업협조협정은 다시 3년간 연장되어 북한 측과 러시아 공화국 하바롭스크변강의 아무르주 집행위원회 측은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이던 1991년 8월부터 1993년 8월까지 3년 동안 시베리아 지역 산림채벌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1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쏘베트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 사이의 림업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8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림업부 김재률부장,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로씨스끼예 레쏘쁘로므이슬렌니끼》 국가협동체 위원장 울라지미르 멜니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로련정부림업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쏘련대사 알렉싼드르 까쁘또가 참가하였다.**

협정문에는 김재률부장과 울라지미르 멜니꼬브단장이 수표하였다."[118]

---

116)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정부사이의 림업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의정서 조인," 『로동신문』, 1987년 3월 4일. (저자 강조)

117) 이후 양국은 이 협정을 다시 3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1994~1996)를 교환하였다.

118) "우리 나라 정부와 로련정부사이의 림업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조인," 『로동신문』, 1991년 8월 10일. (저자 강조)

러시아 역시 산업용 목재가 계속 필요한 실정인데다 북한 측에 넘겨주고 있는 공동개발 몫(북한 측 지분할당액)으로 다른 나라 인력을 불러들여 교체시킬 수 있는 형편이 못될 만큼 시베리아 벌목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와해되기 직전인 소비에트 연방정부도 위 합의를 지지했다.[119] 소련 해체 후 1995년 2월에는 러시아와 북한 역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1998년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에 양국이 합의하였다.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사이의 토내에서의 통나무생산, 목재의 종합적 가공 및 산림복구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24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림업부 리은석부부장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로씨야련방 국가공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아. 아. 깔린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정부림업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 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120]

그 조약 내용을 보면, 하바롭스크 변경주와 아무르 자치주에서 북한의 벌목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하바롭스크의 베르후네부렌스크, 띈진스크, 셀렘진스크 및 아무르 자치주의 제이스크 등에서 사회간접시설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조약에는 북한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든다면 북한은 러시아연방 내에서 러시아 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상대국가의 법을 준수한다는 굴욕적인 내용에 서명을 하게끔 한 것은 러시아 속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 상통한다.[121]

---

119)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2』, p. 182.

120) "조선과 로씨야 두나라 정부가 림업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조인," 『로동신문』, 1995년 2월 25일. (저자 강조)

121) 심의섭・김종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p. 43.

<표 4-6> 소련(러시아)-북한 간 임업 협정, 1987~1995

시기	협정
1987. 3월	· 임업분야 협조확대에 대한 의정서 합의
1991. 8. 8.	· 임업협정 재계약, 이 계약의 효력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1995. 2. 24.	· 임목생산량을 1991~1993년의 수준보다 30% 감축 · 북한 벌목공의 수를 15,000명~20,000명에서 7,000명으로 감축 · 벌목공들에 대해 러시아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함. · 러시아 내의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함. · 노무자들에게 임시거주권 발급 및 외출 허용 · 북한 노무자들의 1일 8시간 근무 규정 · 러시아 인권단체들의 북한 벌목작업장 출입 허용

* 출처: 통일부, 『北韓實態』(서울: 統一部, 1998), p. 145.

소련 해체 이후 새롭게 수립된 러시아연방의 체제전환 시기와 맞물려 북한의 노동이주 정책은 벌목집약형 노동이주(1967~1991)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이 결합된 통제된 노동이주(1992~2000)로 변화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체제전환 정책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환경 요인으로 작용했고, 북한의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통제된 노동이주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122]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련 해체를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던 러시아의 친서방적 행보는 사회주의 진영 및 형제국에 대한 배반행위로 느껴졌다.

"일본 엔에취케이방송보도에 의하면 고르바쵸브가 지난 5월 30일 쏘련의 카자흐 공화국의 알마 아따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서방7개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할 의향을

122) 이영형,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6집 1호(2016), p. 135.

다시금 표명하였다 한다.

그는 **쏘련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면 서방나라들의 협력을 받아야 하므로 서방7개국수뇌자들과 의견교환을 하고저 한다**고 하면서 이 수뇌자회의에 참가할 의향을 강조하였다고 엔에취케이방송은 지적하였다.

5월 31일 영국의 비비씨방송은 **고르바쵸브가 서방의《원조》를 요구하기 위해 서방7개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하려 하고있으며 거액의 서방자금을 받는 대가로 근본적인 시장경제체계에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있다**고 전하였다."[123]

1990년대에는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열차를 타고 헤로인을 밀수하던 북한 벌목공 몇 명을 적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체제 전환 이후, 특히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 옐친(Борис Ельцин)의 집권 초기에 한국과 경제 및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예전 사회주의 형제국의 모습을 잃은 러시아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각종 범죄행위 등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현지 지도자들 사이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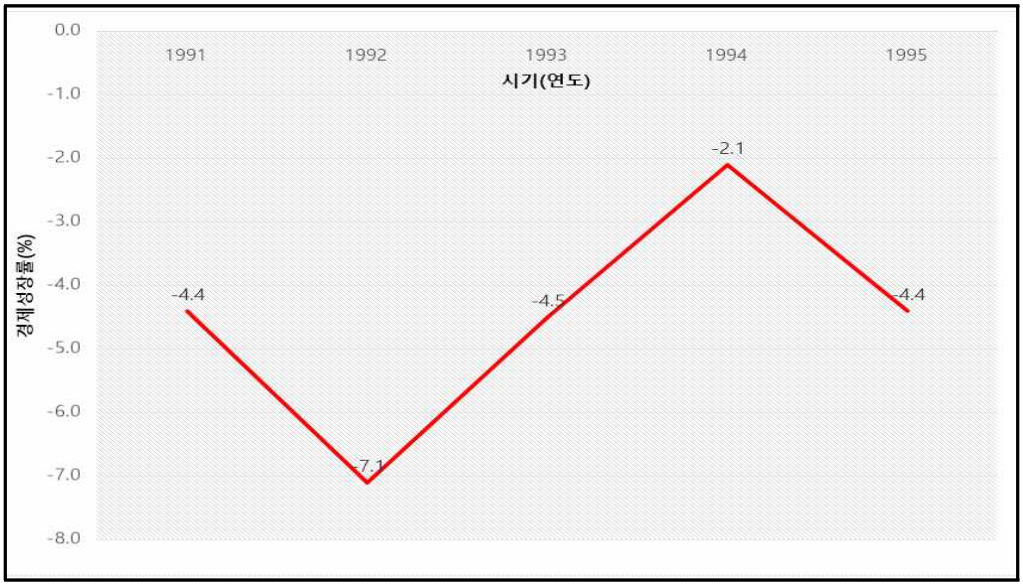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동맹국들의 몰락과 자국 내 기근 등이 겹치며 체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노동력 송출만큼은 반드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필요가 있었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 경제는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1990년~199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총 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한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붕괴하였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소련 등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교역이 위축·중단됨으로써 더욱 가중되었다.[124]

---

123) "고르바쵸브의 서방7개국수뇌자회의 참가문제에 회의참가국들이 각이하게 반응," 『로동신문』, 1991년 6월 14일. (저자 강조)

124) 권숙도 외, 『2023 북한이해』(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3), pp. 188-189.

<그림 4-5> 탈냉전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 1991～1995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북한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저자 작성.

소련은 모자라는 노동인력의 확보와 주변 국가 관리를 명분으로 원자재를 거의 무상에 가까우리만큼 싼값으로 제공했다. 이는 상호 간 이익을 바탕으로 한 교환인 셈이었다. 그러나 국가 간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이용 및 작업 조건은 아주 불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북한과 베트남인들의 작업 현장은 흡사 감옥과도 같은 상황으로 묘사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 환경이 날로 악화일로를 치닫자 구소련 정부위원회는 '국제경제 활동의 실질화'에 관한 정상화 방안을 채택하여, 1989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125]

이 방안이 효력을 발생하자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규모 면에서 크게 줄어들게 되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 역시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걷잡을 수 없으리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1993년 러시아연방 정부는 연방이민국[126]을 만들어 법적

125) 심의섭・김종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pp. 41-43.
126) 2016년 4월 러시아연방 내무부 소속 이민국으로 흡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으로 모든 이민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1993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 명의로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노동자 이용에 관한 정상화 방안' 명령서를 내게 된다.[127] 그러나 모스크바 역시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제3차 북한 이주 노동자의 러시아 유입을 시작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0년경부터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이는 러시아 경제 회복의 시작과 맞물려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 러시아와 북한 경제 관계의 초점이 에너지와 기반시설에 맞춰져 있던 반면, 양국 간 교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상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북한의 노동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러시아와 북한 양국은 2000년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2001년에는 보다 경제에 초점을 맞춘 신뢰 선언을 체결하였다.[128]

해외에 파견되어 일하던 북한의 노동자들 역시 그들의 형제국들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록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이들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었다. 당초부터 이들은 거시적으로는 체제 유지·강화라는 북한 당국 차원의 필요에 의해, 또는 인접해 있는 부강한 국가였던 소련에서 벌어온 돈으로 북한에서 더 나은 삶을 얻고자 했던 개인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에 더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조차 엄격히 제한되는 북한의 폐쇄적인 환경을 벗어나 해외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에서도 일부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계약 만료 후 소련에서 북한으로 돌아온 임업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일단 한 번 소련으로 파견되어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임업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나가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벌목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노

127) 심의섭·김종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pp. 42-43.

128) Remco E. Breuker & Imke B.L.H, van Gardingen, (eds.), *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 (LeidenAsiaCentre: 2018), pp. 46-47.

임은 북한 내에서와 비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북한에 들어왔다가 다시 소련 혹은 러시아로 나가는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재쏘생(2회 파견), 삼쏘생(3회 파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129] 앞선 검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초기에는 지원자가 없어 수형자들을 차출하여 파견하였다. 이후 관리감독의 측면과 함께 치열해진 지원 경쟁으로 인해 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담화사업 및 성분 및 이념·사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파견 노동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이들의 파견은 이념의 학습·심화를 통한 보다 높은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국가적 차원이든 혹은 개인적 차원이든 간에 오히려 외화수익을 얻고자 함이었던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의 이주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다년간의 거주를 통해 이미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워 변화를 꾀하고 있던 러시아 내에서 기회를 찾고자 했다.

제5절 소결

소련과 북한이라는 두 형제국은 이미 광복 후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에 진주하고, 소련식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시점부터 매우 긴밀한 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같은 통치체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특히 극동지역에서 양국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약 17㎞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까닭에 노동력의 이동이 매우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소련 혹은 러시아로 송출하는 노동력 송출의 형태는 시기별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노동력 이주는 이미 광복 직후였던 1946년 무렵부터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사할린 지역 등으로 주로 어로행위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129)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p. 94.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관료들의 중국정부와 중국인 노동력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은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달리 나타난다. 실제로 중국노동력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연해주 주민들의 감정은 과거 옐친 대통령이 추구하였던 시장개혁 조치에 대한 지역 내 기득권자들의 반발과 결합하였으며, 이는 경제침체에 빠진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회복 노력으로 이어진다. 또한 연방정부의 일각에서도 러시아 내 인권단체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의 벌목장을 북한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러시아 간의 형제국의 중요성이 여전히 비중 있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130]

초기의 양국 간 나타난 노동력의 이동이 주로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규범에 의한 것이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북한 주민의 개인의 경제적 유인이 파견을 통한 이주의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도록 만든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소련 내 노동시장의 분절과 결합함으로써 다수의 북한노동자들이 현지에서 2차 부문에 종사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과 소련(현재의 러시아)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력의 이입과 송출은 초기에 사회주의 국가를 소련 주도 하에 한데 묶어 내기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이념, 즉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우애에서 주로 비롯된 모습이었으나, 그 관계는 점차 양국 간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게 된다.

북한은 극동 지역에 노동자를 파견함으로써 특히 1967년 이후 소련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국 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목재 공급 및 부족한 외화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북한 노동력의 송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급격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양국 관계는 잠시 냉각기에 들어서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변화 이외에도 벌목장 내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자들의 인권상황 및 북한 노동자들의 자국 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러시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친서방적인 정치적 행보는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

130) 이채문, “남북협력시대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노동력의 상황과 정책과제,”, p. 228.

<표 4-7>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 2014~2018[131]

연도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FOREIGN CITIZENS WITH VALID WORK PERMITS)	
	북한 노동자 (단위: 1,000명)	전체 외국인 대비 (단위: %)
2014	30.7	2.9
2015	30.4	16.7
2016	29.1	20.2
2017	24.1	21.0
2018	8.0	8.6

* 출처: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s://eng.rosstat.gov.ru/. 『Russian Statistical Yearbook』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즉 지정학적 접근성과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던 동맹의 경험,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러시아 내 '노동시장 분절'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자국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송출하도록 만들고 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4년~2017년 기간 러시아 내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지고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약 25,000에서 30,00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즉 서방의 제재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여 노동자 송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31) 위의 통계는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가진 인원만을 집계한 것이다. 제재 등으로 인해 2019년~2022년 기간에는 북한 노동자 수를 0명으로 집계하고 있어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실제로 한 때 4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2397)을 채택함에 따라 2018년에는 8,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결 론

현대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노동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그들의 형제국으로 떠났다. 이주의 관점에서 노동력의 이입국은 당시 진영 내 선진국인 소련과 동독이었으며, 송출국은 신생 약소국이었던 북한과 베트남이었다. 소련과 동독은 자국 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한편으로 이주 노동자들 역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로 떠났다. 초기에는 교육과 실습을 겸한 연수생 신분을 지닌 채 일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로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이 이주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이주 이론들 가운데 특히 '노동시장분절론'이 대표적이다. 즉 이입국의 생산요소시장은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는데 이 중 임금이나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현지인들이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분야인 2차 부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송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선진국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그들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고향의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북한과 베트남 양국은 이러한 형태의 국가 주도의 이주 노동을 통해 상당 수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베트남의 경우 동독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자국의 노동자와 관련된 몇 가지 사전공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대국 정부로부터 직접 외화를 송금받을 수 있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수입의 일부를 이른바 '계획분'으로 본국에 송금했고, 소련 측에서는 현물을 북한 당국에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관점, 다시 말해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나타난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집권적인 철저한 계획경

제의 체계 하에서 시장 혹은 임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주 노동의 형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이념 아래 국가 차원에서 채택했던 정치적 규범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의 확립과 물자교류 및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CMEA가 있다.[132]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일부 회원국은 CMEA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겪게 된다. 즉 국제 분업의 원리 하에서 다른 선진국들의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나머지 국가들은 다른 분야를 특화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의 소비재 생산 등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81년을 기준으로 CMEA가 베트남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베트남 수입품의 90%는 그 회원국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베트남으로서는 공업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가로 농산물과 광물로 채무를 갚아야만 했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해외로의 노동력 송출을 선택하게 되었고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동독으로 떠나게 된다.[133]

다음으로 또 다른 측면,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규범에 따라 소련은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전후원조를 책임지게 된다. 형제국들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게 된 북한은 이러한 도움을 국제주의의 이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주의 이념은 소련으로의 북한 연수생 파견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지배가 끝나고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했던 소련은 여러 설비와 기계를 지원했으며, 북한이 스스로 이 장비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북한의 유학생들을 소련으로 보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소련에서 연수생 신분으로 실습에 참여하며 임금을 받기도 했다. 또한 1950년대 소련 내 벌목사업에 종사할 이주 노동자 파견을 위해 체결된 양국 간의 협정에서도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친분이 드러난다. 1957년 협정의 내용에 따르

132) 편집실, “알아둡시다: 코메콘,”『지방행정』, p. 156.

133) 채수홍,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pp. 15-16.

면 역시 극동에 위치한 하바롭스크 지역 내 침엽수 벌채 권한을 북한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베트남과 동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1950년대부터 베트남의 어린 학생들이 동독으로 가서 공부했으며, 이후 베트남 전쟁 기간에도 수많은 인턴과 견습생들이 동독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힘썼다. 동독 정부는 자국으로 온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환대했고,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과 정치적 규범,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근거한 형제적 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거 사회주의 진영 내 정점 혹은 핵심적인 지위를 가졌던 소련과 동독은 분명 그들에게 노동자를 송출했던 북한이나 베트남에 비해 현저하게 우월한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소련 간 체결된 임업 협정(1967)과 이후 베트남-동독 간 노동 협정(1980)의 성격은 어느 한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대상으로 일방적 원조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는 양국 상호 간에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협력은 계속될 것처럼 보였으나 독일이 재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등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북한·베트남 양국은 공히 정권 수립 이후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 베트남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모두 식민 지배를 경험했고, 독립 후에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유사한 경로를 가진 두 신생 사회주의 약소국은 각각 사실상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치렀으며, 전후 재건을 위해 형제국들의 원조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북한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과 동독의 관계는 이미 1940년대부터 나타나는 오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형제국 간의 연대는 송출국 노동자들의 이주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해석은 이주의 흐름이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 이전부터 존재하던 연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이주체계 이론과

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은 1967년 소련과의 임업 협정을 통해, 전쟁 중이던 베트남은 그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난 1980년 동독과 노동 협정을 각각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북한과 베트남 양국 모두 계약을 체결한 소련·동독 정부와 계약을 갱신하며 이주는 지속된다. 여전히 그 연대는 계속되었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초기 사회주의 진영 내 정치적 규범에 의한 원조의 색채가 짙었던 이주 노동자 유입의 목적은 점차 자국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또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간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소련과 동독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과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베트남인들이 계약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동독 정부는 1990년 10월 서독에 합쳐지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물론 동독 주민들이 결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서독 정부를 근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독일연방공화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베트남의 형제국가가 될 수 없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 동독의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조업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대부분의 노동계약이 무효화되었다. 독일 정부는 베트남 이주자들의 귀환을 설득하기 위해 1990년 5월 13일 하노이와 송환 협정을 체결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노동자들이 기꺼이 독일을 떠날 경우 퇴직금과 무료 귀국 항공권 외에도 3천 서독 마르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베트남 노동력의 절반이 넘는 3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이 합의를 선택했고, 취업 전망이 거의 없는 베트남으로 돌아갔다.[134]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위치한 양국의 물리적 거리 역시 이주노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135]

---

134) Christina Schwenkel, “Rethinking Asian Mobilities,”, p. 252.

135) 한편 베트남으로 귀환하지 않고 독일에 남는 것을 선택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한 세대가 지난 현재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습이다. 실제로 독일에 정착한 베트남인들은 학업 수준이 뛰어나고, 생활을 매우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정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통해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도 북한의 이주 노동자들은 해체된 연방을 실질적으로 계승한 러시아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 현상은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을 비롯한 광물 등 천연자원이다. 반면 러시아는 석유 매장량 세계 6위(1,078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37.4조㎥), 석탄 매장량 세계 2위(1,621억 톤)의 자원대국이다.[136] 즉 북한의 광물자원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다.

하지만 시야를 북한의 노동력으로 돌린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최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본인이 소속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청부'를 구해 러시아인의 집을 수리하는 등 추가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해주 지역에서 이런 집수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뿐만 아니라 북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베트남 노동자들도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노동자는 일이 너무 느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며, 중국과 접경지역인 탓에 중국 노동자들 역시 환영받지 못한다. 지역정부나 현지 주민들은 중국인들에 의한 잠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러시아 노동자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인기가 가장 높다.[137]

게다가 러시아의 생산 가능인구는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극동지역의 노동력 부족은 훨씬 더 심한 수준이다.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총 8개의 연방관구(Federal District)[138] 중 하나인 극동연방관구

---

136)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주요자원('21, BP) : 석유(1,078억배럴, 6위), 가스(37.4조㎥, 1위), 석탄(1,621억톤, 2위), 금(7,500톤, 2위/USGS 기준), 우라늄(486천톤U, 4위/WNA 기준) 등.

137)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 pp. 83-84.

138) 중앙 연방관구를 비롯한 북서,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남부, 북코카서스 등 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의 면적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41%(695만㎢, 한반도의 32배)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5.56%(812만 명)에 불과한 수준이다.[139] 1991년 이후 체제전환을 경험한 러시아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또한 대다수의 젊은 층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는 건설 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일할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역도 비단 극동이나 시베리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러시아 내 노동 시장의 2차 부문에서 특히 북한 이주 노동자들은 환영받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정부는 노동자 교류를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냉전 이후 더 이상 이념적 유대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음에도, 베트남-동독의 사례와는 달리 여전히 북한의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140]

지금까지 북한과 베트남의 노동자들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과 소련으로 이주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형태의 이주 노동이 갖는 시기별 특징과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1990년대 소련과 동독 등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 북한과 베트남 정부,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겪게 된 경로의 차이점을 가져오게 된 요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로 이주하여 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으로부터의 '노동력의 이주' 외에도 북한과 소련 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주로 북한에서 노동자 신분

139)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2021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개황, p. 6.

140)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결속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비록 1991년 이후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하였음에도, 오랜 세월동안 냉전을 거치며 사회주의 형제국가로서 함께했던 양국 관계는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지정학·지경학적 요소들로 인해 다시금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2022년 2월에 개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마치 신냉전을 연상시키는 대결 구도를 재등장시켰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협력이 강화되자, 이에 맞서 북한은 2023년 9월 12일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발표한다. 양국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동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을 가지고 소련으로 이주했던 인력들을 위주로 검토하되 그 직종별로 구체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141] 그러나 베트남에서 노동자 외에 학생과 견습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독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북한과 소련 사이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성격 혹은 목적을 가진 이주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노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주의 범위와 분류 기준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관계의 현실, 북한이라는 사회의 폐쇄성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진위 여부의 불분명성 등 이유로 인해 현지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귀환했던 북한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로 1980년대 이후 임업 노동자로 선발되어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주했던 경험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42] 이미 상당시간이 경과한 까닭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대략 5~10명 내외의 비교적 소수 인원만이라도 인터뷰를 실시하여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는 1980년대 동독으로 떠났던 베트남의 '계약 노동자' 사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41) 제4장 제2절에서 '근로실습'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42)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과거 증언을 포함한 기존의 문헌 및 선행연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시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 과정과 현지 생활 및 1990년대 이후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1. 북한문헌

가. 신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기치 밑에.”『로동신문』. 1956년 4월 21일.
“위대한 쏘련은 조선인민의 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이다.”『로동신문』. 1957년 8월 13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자기 사업을 마치고 조국을 향하여 출발.”『로동신문』. 1967년 3월 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쏘련간의 경제과학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회담에 대하여.”『로동신문』. 1967년 3월 6일.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정부사이의 림업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의정서 조인.”『로동신문』. 1987년 3월 4일.
“고르바쵸브의 서방7개국수뇌자회의 참가문제에 회의참가국들이 각이하게 반응.”『로동신문』. 1991년 6월 14일.
“우리 나라 정부와 로련정부사이의 림업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조인.”『로동신문』. 1991년 8월 10일.
“조선과 로씨야 두나라 정부가 림업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조인.”『로동신문』. 1995년 2월 25일.

2. 국내문헌

가. 단행본

마이클 새머스(Samers, Michael), 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공역,『이주』(서울: 푸른길, 2013).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Castles, Stephen & Miller, Mark J), 한국이민학회 역,『이주의 시대』(서울: 일조각, 2013).

통일부,『北韓實態』(서울: 統一部, 1998).

설동훈,『노동력의 국제이동』(서울: 서울대학교, 2000).

야노쉬 코르나이(Kornai, Janos), 차문석·박순성 공역,『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파주: 나남, 2019).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남기정 역,『(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서울: 창비, 2014).

마리아나 E. 트리구벤코 외,『북한경제와 남북한관계 전망: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가 본』(서울: 북한연구소, 1992).

서동익,『인민이 사는 모습 2』(e북: 도서출판 오린, 2019).

채학선,『(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정말 이럴 수가!』(서울: 연합통신, 1994).

장기홍,『울음보가 터진 男子』(서울: 성심도서, 1993).

이석기・양문수・정은이,『북한 시장실태 분석』(세종: 산업연구원, 2015).

권숙도 외,『2023 북한이해』(서울: 국립통일교육원, 2023).

이상우・하영선,『현대 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4).

최윤영,『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카트야 호이어(Hoyer, Katia), 송예슬 역,『장벽 너머: 사라진 나라, 동독 1949-1990』(파주: 서해문집, 2024).

채수홍 외,『(통일 연구자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이철수 외, 『북한을 파견하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삶과 노동』(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나. 논문

강경화, “북한 인력 해외송출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Lam Huyen Trang Stephanie, “아시아계 노동자의 독일 이민과 통합: 파독 한인 간호사와 베트남 계약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1).

정성준, “북한노동자 해외파견 이면에 있는 북한-러시아 비공식 경제협력체계,” 『평화통일논총』, 제2권 1호(2023).

석현호,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제23권 2호(2000).

최영진,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新亞細亞』, 제17권 4호(2010).

박아름,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 분석” 『역사문제연구』, 제45호(2021).

채수홍,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아시아리뷰』, 제12권 제3호(2022).

이영형,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RUSSIAN STUDIES)』, 제26집 1호(2016).

심의섭・김종일,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제2호(1999).

오정은, “독일 통일이 이민정책에 미친 영향: 동·서독 인구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관계를 중심으로,”『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7(2018)

윤용선, “독일 베트남 이주민: 교육과 이주민 통합,”『역사문화연구』, 제47집(2013).

윤애림,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민주법학』, 제73호(2020).

심지화(Shen Zhihua)・이단혜(Li Danhui),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딜레마에 관한 서론: 중소 동맹의 결렬로 본 사회주의 국가관계의 구조적 불균형,”『大東文化硏究』, 제 98집(2017).

백성호,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특징: 1995년부터 2004년까지『로동신문』의 사설분석을 중심으로,”『國際政治論叢』, 제45권 제4호(2005).

양운철,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 체제전환의 관점에서,”『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4호(2011).

다. 기타

편집실, “알아둡시다: 코메콘”『지방행정』, 제39권 435호(1990).

이원웅, “북한 해외근로자, 어떻게 사나?”『통일한국』, 2013년 12월호.

김양희, “저자와의 대화: 시베리아벌목장 탈출기를 쓴 장기홍.”『북한』. 1993년 9월호.

이채문, “남북협력시대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노동력의 상황과 정책과제,”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2001).

한국학술정보 엮음, “THE PRESIDENT’S DAILY BRIEF_12_March_1968,”『CIA 기밀해제 총서(CIA’s Declassified Documents) 34: 존슨 대통령 일일 보고서, 1968_01-03(2)』(파주: 한국학술정보, 2017).

『일다』. 2023년 11월 12일.

외교부: http://www.mofa.go.kr.

3. 외국문헌

가. 단행본

L. A. Krushanova, *Migration Policy in the Far East of the USSR, mid-1940s－1970s* (Vladivostok: IHAE FEBRAS, 2014)

나. 논문

Andrei Lankov. “North Korean Labor Export to the USSR/Russia.”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18, No. 3, 2020.

Gertrud Hüwflmeier. “Socialist Cosmopolitans in Postsocialist Europe: Transnational Ties among Vietnamese in the Cold War Period and Thereafter.”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12, No. 1, 2017.

Mike Dennis. “Working under Hammer and Sickle: Vietnamese Worker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80-1989.” *German Politics*. Vol. 16, No. 3, 2007.

Matthias Maass. “‘Soft’ Coercive Diplomacy versus Informal Resistance: Attempts at Deporting ‘Illegal Vietnamese’ from Reunifying Germany, 1990-1995.”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Vol. 9, No. 3, 2014.

Christina Schwenkel. “Rethinking Asian Mobilities: Socialist Migration and Post-Socialist Repatriation of Vietnamese Contract Workers in East

Germany." *Critical Asian Studies*. Vol. 46, No. 2, 2014.

_____. Christina Schwenkel, "Socialist Mobilities: Crossing New Terrains in Vietnamese Migrat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Migration Review*. Vol. 4, No. 1, 2015.

Micha Rehder, "Zwischen zwei Welten: Vietnamesische VertragsarbeiterInnen in Rostock,"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2013).

Ngo, Bao Trang, "Integration der Vietnamesen in Ostdeutschland: Deutsche und vietnamesische Sichtweisen in qualitativen Interviews," Zwickau: Westsä chsische Hochs-chule Zwickau(2021).

다. 기타

Remco E. Breuker & Imke B.L.H. van Gardingen, eds. *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LeidenAsiaCentre, 2018).

Ann-Julia Schaland & Antonie Schmiz, "The Vietnamese diaspora in Germany,"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2015).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n and Vietnamese Migrant Workers
-Focusing on Migration to Former Socialist Countries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Nam, Hyeon Se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Yu, Young Soo

North Korean laborers began migrating to Russia's Far East as early as the 1940s. Initially, they were engaged in fishing activities, mostly in the Sakhalin region, a sparsely populated and inhospitable area. This movement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became more active after the Korean War, and in 1967, more than 3,500 forestry workers from North Korea moved to the Soviet Union as a result of a bilateral forestry agreement between Kim Il Sung and Brezhnev. This was followed by a major influx of North Korean workers to the Khabarovsk and Amur regions, and bilateral agreements on labor migration were repeatedly extended and expanded.

Around the same time, in Southeast Asi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ich had won the civil war against South Vietnam, sent students and workers to its socialist brother in Europe, East Germany. Similar to the North Korea-Soviet Union case, the migration of Vietnamese students and workers to the GDR can be traced back to the 1950s, with the first "Moritzburgers" arriving in the GDR in 1955-1956, and a large number of Vietnamese trainees working in the GDR until the early 1970s, at the height

of the Vietnam War. A formal labor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igned in 1980, and in total, more than 70,000 Vietnamese workers would sign contracts and travel to East Germany to work in various fields until the GDR government disappeared.

In this study, we focus on migrant workers from the socialist camp. Initially,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 and Vietnamese workers to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was characterized as a counter-migration of support or aid based on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he political norm of the socialist camp, and solidarity between brotherly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n economic dimension to this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 Germany, migrant workers from North Korea and Vietnam were able to effectively fill the shortage of labor in their own countries, mainly in the secondary sector of their dual labor markets.

These migrants can be categorized as students, trainees, or workers, depending on their status, or by the type of work they are engaged in at any given time, such as fishing, forestry, or construction. However, this form of migrant labor has changed since the 1990s, with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While Vietnamese workers who had been working in the country since the demise of the East German government have returned home in large numbers under repatriation agreements signed between the German and Vietnamese governments, and some have successfully resettled in the country,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 workers to Russia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has continued to this day in various forms. This can be explain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the two countries to each other in the Far East and their

shared ideology in the pas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orth Korea's labor force over Russia's in economic terms, and mutual political needs, and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n migration to Russia will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migrant workers, dual labor market,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Vietnamese contract workers, North Korean forestry workers, Soviet Union, East Germany